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220020-1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정책 모음집

2022. 6. 1.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중앙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정책공약정책(<https://policy.nee.go.kr>)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별 활동을 촉진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 정책 모음집을 별간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더불어민주당 .....	1
국민의힘 .....	23
정의당 .....	41
기본소득당 .....	63
코리아당 .....	85
노동당 .....	107
녹색당 .....	123
대한당 .....	131
자유통일당 .....	145
진보당 .....	159
통일한국당 .....	189
한류연합당 .....	20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No.	정 책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
2	무주택자·1주택자 지원 및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디지털·에너지 일자리 대전환
4	보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5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6	노동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7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지방분권
8	소멸위기 극복,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9	한반도 평화 정착, 국익우선 외교, 스마트 국방
10	국민주권 정치·사법 개혁 및 제도 기반 조성

정책순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

정책분야 산업자원, 재정기재

□ 목 표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팬데믹 이전 일상 회복

□ 이행방법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보상과 활력 제고
  -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
  -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도입(한국형PPP)
-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원활한 재기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임대료 부담 완화
  -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
  - 장기안심상가 및 공공안심상가 지원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

## □ 이행기간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시점까지 보상 지원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 등



정책순위

2

## 무주택자·1주택자 지원 및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정책분야 건설교통

### □ 목 표

- 무주택 서민과 1주택자의 부담 완화 및 두터운 보호
-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 □ 이행방법

-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활성화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추진
  - 임차료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전월세 소득공제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확대
-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보유세 세부담 완화 방안 수립·이행
  - 1주택자 취득세 인하 추진
  - 실거주 중심의 양도세 개편 추진
- 다주택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중 보유토지, 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자 등의 '억울한 종부세' 합리화
  -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조세형평성 제도 마련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비합리적 특혜 폐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취득세, 종부세 등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불로소득 억제

### □ 이행기간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디지털·에너지 일자리 대전환

정책분야 산업자원, 환경, 과학기술

□ 목 표

- 산업·디지털·에너지 일자리 대전환

□ 이행방법

- 산업·디지털·에너지 대전환
  - ① 산업 대전환
    -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탈탄소화
    - RE100 실현과 탄소국경조정(CBAM) 대응
  - ② 디지털 대전환
    - AI, 양자기술, 블록체인, 로봇, ICT 등 4차 산업혁명 대전환
    - 디지털 AI 인재 육성, 메타버스·디지털트윈을 통한 효율성 제고
  - ③ 에너지 대전환 : NDC 40% 조기 달성
    -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구축(풍력, 태양광, 그린수소 투자)
    - 탈원전, 감원전 에너지 전환
-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경쟁력 제고
  -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 탄소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탄소중립 전환·제조공정 효율화 추진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추진
  -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계획' 마련
  - 석탄발전소, 내연자동차 노동자의 체계적 일자리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 혁신성장·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 성장동력 육성 추진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5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으로 지역성장 활력 제고
- 디지털 전환으로 전 산업의 체질 개선 추진
  - 산업 현장의 DNA(Data·Network·AI)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도 제고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격차 해소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혁신으로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 추진
  - 풍력발전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한국형 윈스톱샵 도입
  -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확충,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기 구축
-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구축으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속 확충
  -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에너지고속도로) 기반 구축
- 석탄발전을 조기 대체, 무공해차로 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지원
  - 석탄발전 조기 대체 추진
  -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무공해차 전환 추진

## □ 이행기간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펀드 등 활용

정책순위

4

보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정책분야 보건복지, 안전

□ 목 표

-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건,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 해소(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 간호간병 통합돌봄 강화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 방문간호 및 방문돌봄 확대를 통한 돌봄 필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 경감
  -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 기반 강화
  -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등을 통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
  -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 획기적 증설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 강화
- 코로나 교육결손 회복을 통한 교육양극화 해소
  - 교과보충, 튜터링, 정신건강 상담·치유 등 지역단위 학습결손 회복 프로그램 추진
  -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지역 인프라(도서관·청소년 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학생·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지역단위별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 확대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장애인복지의 기본 철학을 시혜와 지원에서 권리와 자기결정으로 전환
  - 정보접근권, 이동권,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문화권, 생활보장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가족생활권, 재활권 등 장애인의 제 권리의 체계적 발전 토대 마련
- 기업, 노동자, 지역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
  - 고용유지 과세특례, 고용증대세제 감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일자리세제 기능 강화
  - 일자리 분석, 맞춤형 훈련·상담, 일자리 이동을 연계하는 일자리전환 플랫폼 구축

- 지역의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단계부터 주거, 문화, 교육(육아), 의료 여건 개선까지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생활시설과 복지시설을 구비한 아파트 형태의 어르신 공동거주 지원주택 대폭 확충
  - 아파트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독립된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지원주택 내에 공동식당 및 빨래방, 물리치료실 및 요양보호실, 복지관 및 사랑방 등을 설치하여 일상생활 및 복지, 여가활동 등 지원
  -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자녀)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실시간 소득기반 사회보험제 도입
  -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연금 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역 의료보험의 형평성 제고

#### ▣ 이행기간

-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5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정책분야 노동, 여성, 교육, 기재

□ 목 표

- 청년 희망, 성평등 사회 구축

□ 이행방법

- 지역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구직자의 채용시 신체검사비용 부담 의무화
  - 지자체 청년수당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
- 대학생·청년의 등록금 및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 지자체 차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졸업한 청년 부담 완화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자격 대폭 확대
- 공공기관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으로 청년들의 취업 탐색비용 절감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임금 분포를 알리오(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
  - 성별과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한 임금 분포 공시
- 청년정치 도전 기회 확대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 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기업의 성평등 경영을 위한 ESG 평가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지원

- ◎ 남녀모두 돌봄의 권리 존중 및 건강한 성 재생산 권리 보장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아빠 육아휴직 권리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 추진
  - 프리랜서·특수고용·비정규직 등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설치
-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스톡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 강화
  -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성별·학력·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 항목 공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
  - 스톡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폭 강화
- ◎ 디지털성범죄 근절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그루밍 조사 및 국제공조 관련 전문인력 확충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 ▣ 이행기간

-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6

노동이 존중받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정책분야 노동

□ 목 표

- 노동 존중의 가치 실현

□ □ 이 행 방 법

- (가칭)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
- 노동관계법의 노동자 권리 강화
  -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공무직 포함) 근로조건 차별 금지 법제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 추정 입증책임 전환
-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 보장
  - 일하다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선보상 후승인' 제도 도입
  - 목록상 업무상질병을 유발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전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노조 할 권리 보장
  -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사업(장) 취업규칙(사용자 일방 작성)을 노·사가 합의 '사업장협정' 으로 변경
- 노동관계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 무제한 근로시간을 허용하는「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단계적 축소
  - 초단시간근로자, 65세 이상 취업자 실업(구직)급여 적용확대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퇴직급여(연금) 적용
- ◎ 지자체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종사 노동자 차별 개선
  -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 ◎ 지역중심의 고용활성화 정책 추진
  -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기본적 제도 마련
  -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중심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지원
  - 지역중심의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 지방정부의 노동 행정 제도화
  - 지자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자체에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확대 추진
  -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확산 및 대상 확대

## ▣ 이행기간

-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7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분야 행정자치, 건설교통, 재정경제, 교육

□ 목 표

- 지방자치 완성, 든든한 균형발전

□ 이행방법

-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부 추가 이전 등 추진
-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교부세율(19.24%) 단계적 인상
-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및 개표요건 폐지를 담은 실질적 주민소환제도 마련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 지방분권 시대에 알맞은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시
  -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점차 전국화 준비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에 다양한 직역 전문가 참여 확대
  - 자치경찰에 유능한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인사 반영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거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역량 강화 지원
  - 스마트 그린산단 확대와 노후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혁신성장의 핵심거점으로 조성
  -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역산업 전주기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기반 마련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심의 지역투자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산업체/대학 혁신체제 구축
  - 초광역단위 지역대학혁신법인 설치
  -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 지역 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및 지역정착 청년 정주 여건 마련
  -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비 집중 투자
-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 사회적 경제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 자원 순환형 경제 기반 마련
  - 산업·에너지·일자리·금융 등 지역내 선순환 구조 조성

#### ▣ 이행기간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8

소멸위기 극복, 살맛나는 농산어촌 만들기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이행방법

- 농촌지역 소멸위기를 균형발전 기회로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임기 내에 농어촌지역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을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쾌적하게 정비
-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5%로 확대, 분권·협치 농정 실현
  -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 농정 예산구조 개편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농가직접지원 단계적 확대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
- 농촌 인력난 해소
  -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농업 인력난 해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지확보 등 윈스톱 지원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기간 등 확대
  -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농산업 첨단기술 상용화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 추진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스마트팜·스마트빌리지 확대
  -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어촌뉴딜 500 및 청년귀어귀촌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어촌뉴딜 500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삶 공간 만들기 사업 시행

- 내륙 어촌 마을에 대한 강마을 재생사업 신설
-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 친환경선박 전환 등 해운 경쟁력 강화
  - 친환경선박 펀드,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등 상선 친환경선박 지원 추진
  -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선박금융시장 육성 추진
  - 우선선화주 인증 제도를 부정기 선화주까지 확대 및 공제혜택 강화 추진
- 국민건강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 국가해양쓰레기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각 주요 연안·도서별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및 인력 완비
  - 연안·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복구 지원 강화

#### □ 이행기간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9

한반도 평화 정착, 국익우선 외교, 스마트 국방

정책분야 통일, 외교, 국방

□ 목 표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 스마트 강군 육성

□ 이행방법

-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통해 접경지역 평화경제 클러스터인 ‘국제평화경제지대 (GPEC: Global Peace Economic Cluster) 조성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 2.0(에너지·자원벨트·동해권 관광, 서해권 첨단산업·물류벨트, DMZ 생태·환경벨트 조성) 및 북한 인프라 구축 협력 추진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
  -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성 강화
  -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
  -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추진
-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추진
  - 미중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
  - 한중간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 투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
  - 단계적 동시 행동을 통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추진
  - 제재와 관여, 이익과 불이익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협상력 강화
  - 비핵화 과정과 평화과정의 시너지있는 진행,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의 상호보완적 운영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역내 군비경쟁 등 안보 불확실성 관리

- 포용적 재외국민·동포 정책으로 한인공동체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 여행객·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해외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 및 영사조력 확대
  - 재외국민의 재외선거 투표권 행사 편의 증진
-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따른 보상 및 지원 강화
  - 민간인 통제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접경지역 주민 고충 최소화
  - 군 사격장 및 기동 훈련장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군인권 보호 강화
  -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
  - 의무복무자 상해보험 등 의료보장 강화
  -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및 장병 인권 보호
- 선택적 모병제 추진 정예강군 육성
  - 국민개병제 하에 ‘징집병’ 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추진
- 보훈보상 체계 재정립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촉구
  - 지방자치단체별 보훈 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 제대군인 지원 강화

## □ 이행기간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자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정책순위

10

국민주권 정치·사법 개혁 및 제도 기반 조성

정책분야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 목 표

-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는 정치교체·사법개혁

□ 이행방법

- 헌법 개정을 통한 87년 체제 전환
  - 4년 중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 검찰개혁 완성
  -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
  - 검사에 대해서도 법조일원화를 확대하여 경력변호사 중에서 검사 선발
-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개편 및 법원 개혁
  -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혁
  -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 도입 검토
  - 국민참여재판 확대
-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편의성 강화
  - 판결서 공개 의무화 및 임의어 검색 기능 보강 등 개선
  -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 재판과정에 대한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및 원격영상재판도 활성화
- 선거제 개혁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 기반 마련
  -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대표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
  - 향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추진



- ◎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및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
  - 헌법재판관(총 9인) 구성방식을 변경(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지명(3인)을 폐지하고, 6인을 국회에서 선출)
- ◎ 범죄대응체계 선진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흉악범죄 재범율 하향
  - 청소년 범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강화
  - 국선변호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송구조 등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범죄자가 내는 벌금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법 개정

## ▣ 이행기간

-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 국비 및 지방비 등 활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국민의힘**



## 국민의힘

No.	정 책
1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
2	주택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3	경제활력 제고, 성장 인프라 구축
4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5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양성
6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7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8	원전산업 강화 통한 탄소중립 추진,경제 안보 확립
9	살고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	보편적 문화복지로 품격있는 대한민국

정책순위

1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

정책분야    산업자원·보건복지

□ 목 표

- 온전한 손실보상, 맞춤형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과학적 방역에 근거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

□ 이행방법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경영 부담 완화)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사업전환·폐업 시 업종전환·취업알선 등 지원
-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감염 후 완치자 후유증(Long COVID) 대책 마련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국민부담 완화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재량지출 감축, 지출 효율화, 지출 시기 조정) 추진

정책순위

2

주택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정책분야 기획재정·국토교통

□ 목 표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내 집 마련을 통한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
-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

□ 이행방법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주택공급 확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분양가 규제 합리화, 신속한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및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하여 임대차 시장의 왜곡 시정
- (부동산세제 개편)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민간 자금 조달 추진

정책순위

1

경제활력 제고, 성장 인프라 구축

정책분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

□ 목표

-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超)격차 확보 및 신(新)격차 창출

□ 이행방법

- (과감한 규제혁신) 규제개혁 전담 기구((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쏘 과정 혁신
-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안정적 원료·공급망 확보)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 반도체, AI, 로봇,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R&D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도 개선) 제때 납품단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편성 확대,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추진

정책순위

4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책분야 보건복지

□ 목 표

-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 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이행방법

- (부모급여 신설) 2025년까지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
-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공시, 아이돌봄 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 포털, 우리동네 키움 포털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아동인권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건강보험 재정 탄력적 활용 추진

정책순위

5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양성

정책분야

교육

### □ 목 표

-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 □ 이행방법

- (초·중·고 AI 교육 기반 조성) 정보교육 시수 확대 및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 등) AI 보조교사(튜터)로 학습 결손·격차 완화 및 기본학력 향상
  -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하여 빅데이터 구축
  -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
- 자기주도적으로 AI 전문가가 되는 메타버스 전문교육과정 지원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속런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입 증대분 활용 추진

정책순위

6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정책분야 정부·교육·국방·산업자원·국토교통·노동

□ 목 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 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청년도약계좌 도입)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일정 한도내 저축하면, 정부 장려금 지급을 통해 만기시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도약계좌 도입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장병들의 의·식·주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강화,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입 증대분 활용 추진

정책순위

7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정책분야 산업자원·국토교통

□ 목 표

-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
-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이행방법

- (메가시티·강소도시) 강소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5대 초광역 메가시티들과 연계시키는 통합형 스마트 지역발전 전략 추진
  -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소외됐던 중소도시를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소도시로 육성 추진
  - 초광역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고속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 운용
  - 강소도시와 초광역권의 동시다발적인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평적 연계로 통합적 지역발전 도모
-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
  - 지역 현실에 맞는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 마련해 글로벌 혁신특구 우선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에 혁신적 규제혁파 시스템 도입
- (지역특화 발전 프로그램) 기업-지역대학-정부-지자체 공동협력으로 지역특화 발전 프로그램 구축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입 증대분 활용 추진

## 정책순위

## 8

## 원전산업 강화 통한 탄소중립 추진, 경제 안보 확립

정책분야 외교통일·산업자원

## □ 목 표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 이행방법

- (합리적 에너지믹스 통한 조화로운 탄소중립)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해 적절한 에너지믹스 수립
  -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 상향
  -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축소
  - 전국 거점 지역에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신산업 성장에 기여
-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탈원전으로 훼손된 원전 공급망·원전산업 기반 복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미래 원전기술 확보 R&D 집중 추진
-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주요 경제 파트너와 교역·투자, 인프라 사업 진출 촉진 등
- (주도적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 통한 국익 극대화)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 원전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과 협력체계 구축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입 증대분 활용 추진



정책순위

9

살고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행정안전

□ 목 표

-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공간 조성
-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 및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 이행방법

-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농업혁신 선도 청년농 3만명 육성)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
-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인프라 구축)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농업분야 R&D 투자 확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스마트 농기계 보급 확대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교육인프라 강화 등 농어촌 특성에 맞는 의료·교육·복지시스템
-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스마트축사 보급 확대, 사료가격 안정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강화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임업농가 지원 강화) 임업직불금 제도 확대,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 (어촌 활력제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연근해 어업의 자급률 제고와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 (이장·통장 처우개선)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현장 행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재원조달방안 등**

- 예산편성 확대,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추진

정책순위

10

보편적 문화복지로 품격있는 대한민국

정책분야 문화관광

### □ 목 표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통한 문화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 국민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 □ 이행방법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지역거점별 중·소규모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건립, 4차산업 지역 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양성,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진흥 주도기관 지정 및 지원
-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어린이·유아 체육활동 강화, 초중고 학생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 제공, 청년 야외스포츠 활성화 지원, 어르신 건강·체력 통합서비스 확대
- (지역별 종목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지역 스포츠기업 연계 종목별 스포츠시설 건립, 노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지원, 스포츠 여가 거점 공간 마련, e스포츠 지역 연고제 '지역 거점 e스포츠 클럽' 활성화
- (지역별 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및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국토 가장자리를 모두 연결하는 4,544km 초장거리 코리아둘레길 완전 개통
  - ▶ 둘레길 인근 관광자원 연계 특화상품 개발, 세계적 걷기여행 대표 콘텐츠 육성

▣ 이행기간

- 2022년 ~ 2026년

▣ 자원조달방안 등

- 예산편성 확대,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추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정의당



## 정의당

No.	정 책
1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
2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 노동권·노동안전 보장, 주4일제 지원
3	시원한 지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대전환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 존중 사회
4	서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5	누구에게나 '딱맞는 지역 돌봄'
6	지역 의료 기반 확충으로 모두의 건강권 보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7	성차별·폭력없는 성평등 지역 사회 실현 지역에서 시작하는 인권 존중 사회
8	청년 기본생활 보장, 청소년 인권과 다양성 존중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9	사회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형 교육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언론·과학기술 기반 마련
10	지방행정·지방의회 혁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정책순위

1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

정책분야 정치, 행정자치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 목 표

-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
- 농어민 소득 확대 및 생태 농어업으로의 전환

□ 이행방법

- ‘수도권 다이어트’로 수도권 집중 해소
  -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이전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지방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 돈이 도는 지역경제
  -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과 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를 지역 공공은행 지정 의무화, 지역화폐 확대
  -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을 위한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역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녹색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경제. 태양광, 풍력, 배터리산업 지역에 배치
  - 재생에너지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의 강력 추진
-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의 서울대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 22%로 인상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농어민 소득 확대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
  - 월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 공익형직불제의 단계적인 증액,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 확대, 선택형직불금(친환경) 비율 20%이상으로 확대
  - 친환경 농어업 비중 30% 확대, 농약 화학비율 사용량 50% 감축
  -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실현
  -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여성 농어민 권리 강화 및 성평등한 농산어촌 문화 정착
- 공공급식 체계 확대 및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수립
  - 지역별 권역별 식량자급 계획에 따른 지역순환 먹거리체계 수립
  -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먹거리 돌봄 체계 강화
  - 권역 지역별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 공공급식 확대

## □ 이행기간

-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정책순위

2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 노동권·노동안전 보장, 주4일제 지원

정책분야 산업자원 노동

□ 목표

-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및 피해 지원 확대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 이행방법

-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 지원 확대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 손실보상 소급적용 (피해인정률 80% → 100% 확대)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지원
  - 집합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 임대료 분담 지원
    -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보유 상가에 임대료 감액 조정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퇴거금지
  -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
- 배달 플랫폼 독점으로부터 중소상공인 보호, 골목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 수수료·광고료를 없애고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별 공공배달앱 활성화
  - 자영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 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자영업자 조직화 지원
  -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 전통 5일장 법적 지위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
  - 환산보증금 폐지와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지역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
-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저소득 플랫폼/프리랜서/1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료 50% 지원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조례 제정
  - 공공/민간, 고용형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관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강화, 노동자 참여 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노동안전 부서 및 전문적인 노동안전조사관 신설
-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조사인력 운용 및 사업장 출입 협조 의무화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반복발생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관급공사 입찰 제한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감정노동자 건강권 보장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조례 제정

- 지방정부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및 지원
- 세탁소에서는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세탁소와 함께 노동자 샤워실, 문화시설 등 운영

● 주4일제 공공부문 시범사업 도입 및 민간부문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 설치 및 공공부문 시범 운영
  - 주4일제 실현 방안, 장시간노동 및 야간·휴일노동 등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
- 민간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지원금 지급, 인증제도 실시)

● 지방정부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반영
- 이사회 안건 상정권한 부여 및 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이사 자격 부여
- 노동이사 선임기관,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참여 유도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정책순위

3

시원한 지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대전환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 존중 사회

정책분야 산업자원, 환경 기타(동물복지)

□ 목 표

- 탈탄소 지역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 해소
-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 존중 사회

□ 이행방법

-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 「기후정의 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및 기후에너지 전담 부서 설치
  - 지방자치단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명시
  -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 설치
  - 지역공공투자를 통한 탈탄소전환 녹색경제 활성화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
  - 지역에너지전환 공사를 광역단위에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
  -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태양광 무상 설치 및 배터리 지원
  - 절대농지 태양광 금지, 건물 옥상과 지붕·고속도로·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
  -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지방분권 강화
  - 「에너지 복지 조례」 제·개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20년 이상, 20평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년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 2040년까지 기존 건물의 50%를 저탄소건물로 리모델링
  - 1가구 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용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 ◎ 2040년 탈핵 추진 및 핵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SMR을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등 2040년 탈핵 추진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시설 인근 지자체의 권한 확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정보공개 확대 및 최인접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대 금지
-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지역주민 건강보호 강화
  - 산업단지·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감축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 물 공공성, 안전성 강화. 하천 및 하구 생태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강화
- ◎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생명존중 사회
  - 동물학대, 안락사, 동물살처분, 번식장, 개식용 없는 ‘생명존중 5無 사회’ 실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확대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 제정
  - 채식문화 확산,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 이행기간

- ◎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방공공은행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및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으로 녹색공공투자

## 정책순위

## 4

## 서민 주거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분야 건설교통 재정경제

## □ 목 표

-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주거 정책 지방분권 강화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 공공성 강화

## □ 이행방법

- 공공주택 20% 실현
  - 공공주택 비중 20% 실현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직접 공영 개발
  - 지역 내 노후 주택, 빈집 등을 지자체가 매입, 임대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지역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 전월세 상한 조례 제정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등과 연동)
  - 지역별 표준임대료제 도입, 지역별 표준임대료 위원회 설치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없는 계속거주권 보장
- 1인·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주거금융 지원을 명시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청년 월세 가구 월 20만원 주거 수당 지원, 불공정 계약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청년용 세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지자체 지원 대학연합형 행복기숙사 확충
  -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 지자체 공급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지자체 공급 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조례 제정
  - 선분양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61개 항목 세부항목 공개
- 주거 정책의 지방분권 전환
  - 획일화된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전환

-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부동산 과표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반값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무상교통 확대
  - 반값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대상 무상교통 확대
  - 도심 승용차 진입 억제를 위한 혼잡통행료(에코패스) 확대
  - 차고지 증명제 도입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저상 시내버스 100%, 장애인 콜택시 확대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친환경 저상 시내버스 보급률 100%로 확대
  -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 상향, 무상 운영 확대
- 공공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등 개인교통 활성화
  - 공공자전거·공공 PM 서비스 확대(이용 요금 절감, 자전거 경량화 추진)
  - 생활자전거(출퇴근·통학·대중교통 환승) 이용자에게 자전거 마일리지 지급
  - 교통량과 시간대에 따라 차선과 도로 폭을 줄인 도로 다이어트 도입
- 도심 재생과 연계한 트램 활성화
  - 상징적 도시에 도로 등 가로 풍경과 유람·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트램 도입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선 교통노선에 경전철 대신 트램 설치

## □ 이행기간

- 임기 내

## □ 자원조달방안 등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부동산 교부세 재원 마련

정책순위

5

누구에게나 '딱맞는 지역 돌봄'

정책분야 보건복지

## □ 목 표

-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딱맞는 돌봄' 제공으로 전국민 돌봄 실현

## □ 이행방법

- 전문가 가정방문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 모든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간호사가 산전산후 건강관리, 산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
  -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서비스 통합 지원
- 아동심리 전문가가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 시군구마다 공공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육성 및 전문센터 운영
  - 공공 아동심리상담 전문가가 어린이집 방문해 보육교사에게 아동발달 교육 및 상담 제공,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환경 진단 및 리모델링 지원
  - 어린이집 의뢰 아동, 저소득층 및 아동학대 피해 등 보호아동, 공적기관의 의뢰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게 아동심리상담서비스, 가정상담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친환경 국공립보육 50%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 공공기관 유희공간 설치, 민간어린이집 매각, 리모델링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기자재, 장난감 등 친환경 리모델링, 친환경 급식 제공
  -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 인상, 보육교사 확충으로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확보
- 아동·청소년(0~18세)부터 무상의료 및 치과주치의제 실시
  - 0~18세 병원비(입원진료비, 비급여 포함) 100만원 상한제 실시
  - 0~18세 치과주치의 도입. 구강건강증진서비스/질환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이 책임지는 아동학대 종합대책 마련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대, 아동보호전문요원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전문양성체계 마련
  - 226개 시군구마다 학대아동쉼터 설치, 가정위탁 지원 및 공공그룹홈 확대

- 보호종료아동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전담요원 처우개선 및 인력 확대
-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대, 요양보호사 월급제로 좋은돌봄 실현
  - 시군구마다 공공재가센터 설치.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 공공재가센터 장기요양보호사 월급제 도입 및 전일제 요양보호사 도입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해 보건의료, 복지, 재활,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공공실버아파트, 실버원룸, 실버자가로 맞춤형 노인 주거,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인 및 사회복지사 상주,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아파트 확대
  -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원룸형 실버주택 도입, 자가주택 개조비용 지원
  - 고령자 자가운전자 지원, 노인 등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지방정부 공공돌봄'
  - 걸어서 10분 거리, 읍면동을 '통합돌봄창구'로 전면 전환
  - 시군구마다 공공돌봄본부 설치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전면 구축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주거 제공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월급제 도입, 안전대책 마련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 공공 재가서비스 종사자부터 월급제 도입, 야간근무 및 중증장애인부터 2인 1조제 도입
  -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적정 기준 마련 및 상시·동일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감정노동 보호, 사용자 조치의무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종사자 대책 마련

## □ 이행기간

-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 정책순위

## 6

## 지역 의료 기반 확충으로 모두의 건강권 보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지역 만들기

정책분야 보건복지 안전

## □ 목 표

- 지역 의료 기반 확충으로 모두의 건강권 보장
-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 이행방법

- 지방 공공병원 확대 및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으로 선진국형 공공병원 실현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중앙정부 요구)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
  -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7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이미 지정 확정되어 설립 중인 4개 권역 조속 건립, 추가 3개 권역 확대
- 공공병원 인력 확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 공중보건인력 확충
  - 공공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공중보건인력 확충 및 정규직화(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 단계적으로 확충, 비정규직 철폐 및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환)
- 건강도시 실현으로 지역 의료 불평등 해소
  -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협력체계는 지자체, 정부 지정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소방 등으로 구성
  - 권역 내 중진권별로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자원 부족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지역형 주치의제 도입 및 동네마다 건강생활센터 설치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형 주치의제(협동조합형, 자발적 등록) 도입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센터 설치(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 안전한 지역

- 노동자 참여 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노동안전 부서 및 전문적인 노동안전조사관 신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조사인력 운용 및 사업장 출입 협조 의무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반복발생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관급공사 입찰 제한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개정
-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관내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화학물질감시단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 강화, 화학사고 예방대책·사고대응계획 마련,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대피 요령, 응급 조치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개정
-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운송노동자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시민과 노동자의 공공교통 정책 참여 보장
- 여성·장애인·노인·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황별 매뉴얼과 지원대책 마련, 범죄 예방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고시원 등 화재취약계층 주거시설 스프링클러·소화기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
- 안전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이행기간

-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정책순위

7

성차별·폭력없는 성평등 지역 사회 실현 지역에서 시작하는 인권 존중 사회

정책분야 여성 기타(인권)

□ 목 표

-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지역 사회 실현
- 지역에서 시작하는 인권 존중 사회

□ 이행방법

- 지역형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평등 일터 보장
  -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제정, 공공부문부터 임금격차 실태조사, 임금공시,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 각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젠더 담당관·성평등 노동 전담부서 설치, 행정 체계 마련
  - 사내 눈치없는 육아 돌봄 실현 위한 슈퍼우먼방지조례 제정(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평등육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도입)
- 성폭력 종합 대책 마련, 폭력 없는 안전사회 구축
  - 권력형 성범죄·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부터 성폭력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성폭력 피해자 인권 기반 안전망 지원 확대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여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 포함),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예산 확대
  - 디지털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확대(디지털 성폭력 응급조치부터 긴급삭제 지원, 전문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종합지원 강화)
  - 시민 참여 성범죄 예방 온라인 지도 제작 등 안전거리 정책 구현, 1인 가구 취약주거 환경 개선, 택배·수리·배달 방문 서비스 유형별 여성 안전 보장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장애·이주·북한이탈여성 권리보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비혼모부, 한부모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가족센터 확대
  - 지원대상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안정적인 생활 지원 확대

- 지역건강안전센터 설치, 성·재생산 권리 보장
  - 임신 중단 상담서비스 표준화, 피임·임신·출산 종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지역건강안전센터 설치, 여성건강 전담 부서 마련,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 안전한 월경권 보장,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
- 여성 대표성 강화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인지예산목표제도 추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위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등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 강화
- 지역별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정부에서 아동 출생 정보를 기록한 ‘출생확인증’ 발급
  -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3대(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학생인권, 시민인권교육) 인권조례 재개정
  -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 조례’ (인권전담부서 혹은 기구 설치, 인권친화 지역만들기 사업 실시, 차별금지의 사유 및 적용 영역 명기)
  -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괴롭힘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자유 보장,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호 등 명기, 학생인권보호 절차 및 시스템 정비)
  - ‘시민인권교육조례’ (시민인권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시행,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 지역에서 시작하는 인권 존중 사회
  - 인권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군 입영자 지원센터 및 군 복무 중 인권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기관 확충
  - 동반자관계 인증제 도입

## □ 이행기간

-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 정책순위

## 8

청년 기본생활 보장, 청소년 인권과 다양성 존중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정책분야 기타(청년·청소년) 보건복지

## □ 목 표

-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 보장, 청소년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 이행방법

-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고용할당제 확대, 구직촉진수당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
  - 청년일자리보장제 조례 제정, 지역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설립
  -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중을 5%로 확대 조례 제정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실업급여로 고용안정망 강화
-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와 지역 청년친화위원회 확대
  - 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지자체 각종 위원회 청년 확대(10%), 주거 및 일자리 위원회 등에는 1인 이상 필수
- 빚 걱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청년 금융복지 확대
  - 긴급 금융복지 제공 : 소액 긴급대출, 저금리 대출 전환, 재무상담 등
  - 불법금융(작업대출, 내구재대출 등)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 청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립 또는 청년지원센터 내 금융복지사업 확대 등
- 혼자 외롭지 않도록 청년 마음건강 지원 확대
  -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온라인 기초 심리검사 시스템 도입
  - 기초 심리검사 후 맞춤형 지원(심리상담, 복지 지원, 네트워킹 등)으로 연결
- 3대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 제도권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 청소년의 문화와 경제권이 존중받는 사회
  - 아동·청소년 공유문화공간(독서실, 춤·밴드연습실, 모임공간, 스터디룸) 확대

- 청소년 무상교통 및 공공자전거 확대
- 교복 재사용권/수리권 보장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및 노동인권센터 설립
-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저상버스 도입 시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법정 대수 도입 및 확대, 운영 기준 표준화
  -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준 내실화, 비리 부실 운영 등이 있는 경우 직영화
- ◎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및 처우 개선,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 ◎ 우리 지역부터 탈시설 10년 로드맵 실시
  -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시설 인권조사 실시
  -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쇄, 경찰에 고발조치
- ◎ 지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및 공공일자리 마련
  - 지역 장애인공기업 설립 (소규모 직업재활시설 지역별 통합·운영,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일반노동시장 전직 지원, 재활치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장애인 50% 이상 고용 및 최저임금 보장)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등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 이행기간

- ◎ 임기 내

##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정책순위

9

사회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형 교육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언론·과학기술 기반 마련

정책분야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사회가 책임지는 미래형 맞춤형 교육
-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언론·과학기술 기반 마련

□ 이행방법

- 초중고 한반 20명, 선생님과 직원 증원, 혁신교육지구로 맞춤형 교육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개선
    - 학교 신증설 및 선생님 증원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요구
    - 20명 교실에서 선진국형 수업과 평가로 학생 맞춤형 교육
  - 우리 자녀 위해 학교환경 개선
    - 화장실과 식수대 등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 다목적 체육관, 학교숲, 과밀학급 해소
  - 교직원 증원, 중앙정부에 촉구
    - 교직원 증원 및 업무 경감으로 학생교육 전념, 학습결손 해소, 책임교육 실현
    - 새로운 교원수급모델 및 중장기 계획의 전향적 마련, 중앙정부에 촉구
  - 혁신교육지구 예산 늘려 맞춤형 교육,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 동네마다 학습지원센터, 가까운 곳에 믿음직한 돌봄, 우리 동네부터 노동인권교육
  - 시군구나 거점마다 1대1 멘토링 학습종합지원센터, 교육회복 방안에 행재정 지원
  - 돌봄시설 확충, 거점형 돌봄 확대, 교육청에 돌봄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요청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국공립 유치원 확충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마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노동인권교육 확대 강화
- 지역 선순환 플랫폼으로 지방대 살리기, 우리 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 지방대·지자체·산업 연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추진
  - 지방대 불리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 재정지원 확충을 중앙정부에 촉구
  - 일정 소득 이하 대학생 가정에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 지원, 공립대 무상교육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 이전, 권역별 현대미술관 건립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극장 지방 이전
  - 국립현대미술관, 기존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관과 건립예정인 대전관에 이어 전국 권역별 건립
  - 가칭 '이전희 기증관' 서울 송현동 건립 재검토, 비수도권 지역 건립
-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지원
  - 읍면동 단위 유휴공간에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예술인의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전시, 공연,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지역별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
- 지역언론 진흥
  -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 전체 정부광고 집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언론에 할당
  -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 지역 중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균형있고 조화로운 디지털 전환
  -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를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단위에 설치
  -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 '종이없는 지방행정'과 탄소배출 감축
  - IT노동자 밀집지역에 IT노동인권지원센터 설치
  - 디지털 포용 조례 제정

## ▣ 이행기간

- 임기 내

## ▣ 자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 정책순위

## 10

## 지방행정·지방의회 혁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통일외교통상

## □ 목 표

-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실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 □ 이행방법

- 지방 행정 투명성 강화
  - 고충처리 '시민보호관' 제도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확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비리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제도화,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폐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 지방 자치경찰 확대 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 시·군·구 단위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사무 확대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및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 대표성, 비례성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강화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원의 윤리적 책임 강화
  -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선심성 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셀프징계 방지, 지방의원 겸직 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 강화,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중계 및 표결실명제 강화, 시민참여형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화
- 지방자치, 주민자치 강화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강화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지원 입법화, 주민자치회 위원 다양성 및 대표성 제고, 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 등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 주민참여제도 확대,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평화로운 한반도

- 기후위기 극복-재생에너지 협력 (신)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
- 의료·보건 협력, 대북 쌀 인도적 지원 등 제재 우회 교류협력
- ‘(비핵)평화시’ 선언과 조례 제정, 사드 추가 배치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반대
- ‘Mayors for Peace’ 등 비핵평화 지자체 간의 국제적 연대체 참여
- 남-북-중-일-베트남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연대사업 추진
- 평화박물관(센터) 건립과 평화문화 활성화
-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법 제정 청원 및 조례 제정
- 주한미군기지의 신속·안전한 반환 추진, 부지 활용에 주민의사 실질 반영

●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주민지원 강화

- 군사적 충돌 방지로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기여
  - 남북군사분야합의의 유지 및 전면 이행
  -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핫라인 적극 활용
  - 서해 5도 주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안보정책 개발, 서해 5도 주민대피시설 확충
- 서해 5도 주민 지원 강화(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 서해 5도 어로한계선 확대)
- 중국어선 불법 조업 관련 피해보상 제도 마련 및 남북 공동 대응 조치 마련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자원조달방안 등

-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으로 확충한 지방재정 활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

No.	정 책
1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2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
3	모두가 돌보는 사회
4	성평등 사회
5	주거권 확보와 부동산 이익의 사회적 공유
6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
7	생태 사회 전환
8	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보장 혁신
9	디지털 전환 가속 및 혁신 이익의 공유
10	정치 독과점 해체와 다원성 보장

## 정책순위

## 1

##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 목 표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 전환
- 전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

## □ 이행 방법

-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으로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 노인기본소득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에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농어민수당
  - 농어업공익수당조례 제정해 월 10만원 농어민수당 지급
  - 지자체별로 기 시행중인 유사 제도보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농어민 1인당 지급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 현재 만 0~8세에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

## □ 이행 기간

- 2022년 준비 기간 거쳐 2023년부터 시행

## □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기본소득·노인기본소득·농어민수당
  - 광역-기초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씩 부담
  - 지자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70%를 임기내 예산으로 배분 사용
  -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의 상당액을 예산에서 활용
  -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총예산액 대비 5~10% 내외 지출구조조정 등
  
- 아동·청소년기본소득
  - 국고보조사업(중앙정부-지자체 부담) 편성에 의한 현행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복지사업으로 전환
  - 전국 지자체의 협력 네트워크 통해 공론화

## 정책순위

## 2

##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 목표

- 잔여적 복지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로 전환
- 디지털 격차 확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춘 복지 및 공공서비스 제공

## □ 이행 방법

- 이동통신 최소 5GB 데이터 기본권 보장
  - 주요 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거점에 무상 와이파이 확대
  - 궁극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법」의 위임행정규칙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적정 비용 할당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보장
  - 정부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에 지역별 ‘디지털 정보 케어’ 항목 신설
  -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실시
- 장애인 권리 보장
  -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자립 정착 지원
  - 기초지자체별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와 비용 최소화
  -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및 문제점 보완
  - 장애인콜택시 확대와 사용 편의 개선
  -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100% 완료,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서 ‘7.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삭제’ → 장애인 지역평생교육센터 접근권 향상
    -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 복지 제고

- 창작활동에 대한 다양한 창작수당 도입, 보편적 문화예술 활동 고무
-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제정으로 산재와 고용보험 지원, 지자체 공공부문 발주 지원 등 시행
- 지자체별 일정 규모 이상 ‘시민예술센터’ 설치해 공연+전시+상영+작업+교육 공간으로 활용, 그 운영은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지역예술인, 시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문화네트워크’가 담당토록 함
- 주요 지자체별 ‘음반과 영상물’ 전문 미디어도서관 설치, 기존 도서관은 음반과 영상물도 함께 구비하도록 확장

◎ 누구나 접근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을 필요한 누구라도 입소 가능하도록 개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노력

▣ 이행 기간

- ◎ 2022년 준비 기간 거쳐 2023년부터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3

모두가 돌보는 사회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 상황에 맞는 돌봄 사회서비스 개혁

□ 이행 방법

- 「생활동반자지원조례」제정
  - 혼인과 혈연 중심 가족 개념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의 자발적 결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례 제정
  - 1인 가구 포함한 생활동반자 가구에 대한 지자체 종합지원계획 수립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복지 지원
  - 국가적 차원의 「생활동반자법」 제정 촉구
- 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즉각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요건을 2023년부터 즉각 폐지 촉구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및 재공공화
  - 「통합돌봄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 등으로 민영화된 돌봄서비스를 재공공화
  -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공공서비스로 제공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된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직영 운영
- 아동수당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
  - 만 0~8세 제공 아동수당을 유럽연합 다수 소속 국가들처럼 만 18세(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확대
- 사회서비스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종합재가센터 확충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규고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

- 대하고 시간제 고용시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사회서비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이상 급여 제공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도 연차유급휴가 감소 불이익 제거
    - 「근로기준법」개정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용하는 노동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삭감당하는 불이익 제거
    - 임신기·태아건강검진·수유시간 근로시간단축에서도 연차유급휴가 감소 없도록 함

#### ▣ 이행 기간

- ◎ 재임기간 중

####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4

성평등 사회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직장·돌봄·성애·재생산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 및 소수자 차별의 철폐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이행 방법

-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 지자체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고 지역사회 사기업 부문으로 확산 유도
  - 여성 관리직 및 임원 여성 비중 확대: 지역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직 및 임원 30% 할당제 의무화, 300인 이상 사기업 부문 확산 유도
  - 광역지자체 차원 민관 합동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
-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 모든 여성 대상 월경용품을 바우처 방식으로 무상 제공
  - 공공부문 생리휴가 도입 및 유급화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지방의료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 병의원과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임신중지 유도약물 처방과 진료 가능토록 함, 임신중단 의료비 급여화 및 건강보험 적용 관계법령 개정 촉구
- 소수자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
  -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젠더건강증진센터 신설하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의료 진료 및 상담과 익명 무료 검사 등 실시
- 성평등한 돌봄
  - 공공부문부터 아빠 육아휴직 사용 권장하고 인사고과에 반영
  - 공공조달에서 아빠 육아휴직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임기내 공공부문 아바 육아휴직 사용률 30% 달성
- ◎ 공공부문 권력형 성범죄 근절
  -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자체 인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단체장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별도로 구성
  -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적용범위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확대(법률 개정 사항) 촉구
  - 비동의 간음·추행죄 도입(법률 개정 사항) 촉구

#### ▣ 이행 기간

- ◎ 재임 기간 중

####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5

주거권 확보와 부동산 이익의 사회적 공유

정책분야 재정, 경제, 복지

□ 목 표

-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 보장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시스템 마련

□ 이행 방법

- 청년 및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 이자율 1.5% 수준 5,000만원 이하 소액 월세보증금대출 확대
  - '행복기숙사' 중심 대학 기숙사 수용률 35% 확대
  - 소형 공공임대주택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의무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 환경 개선
  -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5% 이하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공급 물량을 2024년 15%, 2026년 25%로 확대
  -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하고, 매입 리모델링 사회주택 시행
  - 「주거기본법」의 유도주거기준을 최저주거기준으로 전환해 인간다운 삶의 기준으로 주택의 최저수준을 상향
-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 공공주택개발의 기본틀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거용 건물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가져감
  - SH공사의 토지임대부 모델을 참고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50만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 2025년까지 50만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목표, 토지임대부 주택단지 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함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을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변경해 입주자가 공급비용의 15%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담토록 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원의 지역 기본소득화
  - 초과이익의 50%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에 반대
  - 도시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한 환수교부금 50%를 지역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 촉구
- 토지세 기반 기본소득
  -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토지세 신설하고 토지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 발의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의 토지세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23년 국민 1인당 월 6만원 토지배당 가능
  - 무주택 서민은 토지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따른 임대료 인하 효과, 토지배당에 의한 임대료 지원이라는 이중의 혜택, 전체 가구의 88%가 순수혜 가구가 됨

##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 6

##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

정책분야 보건의료, 환경

### □ 목 표

- 전국적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 위기 극복
- 생태사회 전환을 위한 지역 성공모델 수립

### □ 이행 방법

- 지역 녹색은행 설립과 녹색금융
  - 중앙정부-광역 지자체-민간의 자본금으로 지역내 재투자 전문 녹색은행 설립
  - 녹색은행은 녹색금융 전문 은행 역할
    -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탄소포집, 전력저장장치(ESS), V2G(Vehicle to Grid) 전력망 등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테크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담보대출 시행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치를 금리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등 녹색금융 시행
- 10개 도시 탄소중립 시범사업
  -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10개 선정해 탄소중립 시범사업 진행, 중앙정부와 사업계획 및 자원 협력
  -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차 100% 보급, 주택과 건물 태양광 보급 등 전면적 탄소중립 사업 시행
- 지역내 전력망에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Smart-Micro Grid) 기술 적용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전력 사용의 효율화 추진
- 탄소중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
  - 태양광 등 에너지협동조합, 전기자동차 Car-Sharing 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

◎ 탄소세 기본소득

-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탄소세 부과하고 세수는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배당(탄소배당)

▣ 이행 기간

-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7

## 생태 사회 전환

정책분야 보건의료, 환경

### □ 목 표

- 경제성장 지상주의 폐지하고 생태사회 전환
- 인권 개념을 자연과 동물의 권리로 연장하는 문명의 전환

### □ 이행 방법

- 지역 중심 생태 참여수당 활성화
  - 지역의 주요 자연보호지역 또는 지역기반보전수단(OECMs) 발굴하고 이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참여수당 지급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자연 휴식년제 등 자연 회복력 강화 활성화
  - 농어민수당, 생태 참여수당과 연계해 어장휴식제(일명 바다휴식년제), 자연 휴식년제를 활성화
- 대규모 어획, 남획 및 어구 쓰레기 규제 촉구
  - 대규모 어획,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한 수산 보조금의 폐지 촉구
- 플라스틱 규제 정책 실시
  -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규격화로 수거 및 재활용 효율화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 일회용 플라스틱 2030년까지 50% 감축 국가적 목표 시행 협력과 촉구
- 공장식 축산 점진적 폐지 지역 모델 사례 발굴과 확산 노력
  - 개식용 금지와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 강화
  - 지역 축산업자, 축산 노동자, 생활협동조합 등과 연계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는 생태친화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 확산
-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거래의 금지
  -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 및 생태통로 확대

- 도시개발에 야생동물 보호 반영하고 야생동물 고려한 도시재생계획 실시
-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지자체 차원 감독 확대강화

● 반려동물 산업 축소와 규제

- 반려동물의 거래를 원칙적 금지 기초에 맞춰 입양문화 확산 노력
- 동물실험 규제 강화, 동물신체 이용 산업 축소 방안 마련 등

● 탈핵 정책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탈핵 로드맵 수립 촉구
- 활성단층에 건설된 12개 핵발전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가동 핵발전소 안전체계 구축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자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8

## 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보장 혁신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 □ 목 표

- 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사각지대의 해소
- 취약 노동자 노동권 보호 강화
- 기본소득 연계 노동시간 단축과 생태 전환의 연계

### □ 이행 방법

- 현장 밀착형 노동권 강화
  -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전담 노무사 배치 ‘노동 상담소’ 설치, 노조 설립 지원 및 노동 관련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의 민원 상담 전담 처리
  - 시민근로감독관 제도 도입(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시민근로감독관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감독권과 동등한 권한 부여
  - 부동산 등기에 있는 ‘확정일자’ 제도처럼 <근로계약 확정일자> 제도 도입
  -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지방 기업체 사용자에게 노동권 교육 이수 의무화
  - 체불임금 근로감독 강화, 지자체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활성화
- 노동조합-지자체-기업 사이 플랫폼 노동자 권리 선언
  -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건 향상을 공동 선언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지자체 인증 마크 수여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제정 촉구
-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조달 인센티브 부여
  - 1일 8시간 기준 주 4일만 일하는 ‘주 3일 휴식’ 사회 지향
  - 실질임금의 감소 없거나 최소화한 기업에 대해 지자체 우수기업 포상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 ◎ 5인 미만 사업장 현장 조사 실시
  - 지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하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의 시정 요구, 고발 등을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개정 촉구
-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 폐지 교육 정상화 노력
  - 저임금 고위험 노동자 제공 제도로 변질된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 폐지하고 3학년 2학기까지 교육 과정을 정상 진행
- ◎ 직장갑질 근절
  -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없이 「직장갑질금지법」전면적용 법 개정 촉구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 금지제’ 도입 「근로기준법」개정 촉구(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상태)

#### ▣ 이행 기간

- ◎ 재임 기간 중

#### ▣ 재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정책순위

9

## 디지털 전환 가속 및 혁신 이익의 공유

정책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

## □ 목 표

-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되는 디지털 전환
- 데이터, 디지털 시민 주권의 강화

## □ 이행 방법

-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 제정
  - 공공부문 디지털 데이터와 ICT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공공의 통제, 이익의 공공화 원칙 기재
  - 행정시스템, 스마트시티사업, 민관협력 ICT 사업 등에서 개방형 표준과 무료 소프트웨어 우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우선 지원 원칙
  - 조달행정에 디지털 기술 주권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 주권 조항 도입
  - 공공이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데이터 생성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마련
-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 시민이 기업에 대해 배당지분권을 갖는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
  -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 IoT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지자체가 50% 이상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육성 시범사업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 협동조합 운영 공공배달앱 모범사례 발굴
  - 가맹점과 배달 노동자로 조직된 협동조합 운영 공공배달앱 사업 발굴해 경쟁력을 갖추 때까지 기술적, 행정적 지원
  - 배달앱 분야 성공 모델 기반으로 택시, 청소, 창작 등 여러 분야로 모델 확산

●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촉진

- 「디지털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제정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디지털 뉴딜펀드 조성으로 공유지분형 디지털 테크기업에 투자
-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비대면 기술 인프라구축,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t신생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
- 수익은 초기에 디지털뉴딜펀드 규모 확대에 사용하고 일정기간 이후 공유부 기본소득 배당

● 기본소득 데이터세 도입 촉구

-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빅데이터에 대해 빅데이터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

● 플랫폼 횡포 방지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제’ 도입해 독점 플랫폼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수료의 일방적 인상, 조회 횟수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온라인 플랫폼의 입주업체 보호 의무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개정 촉구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 정책순위

## 10

## 정치 독과점 해체와 다원성 보장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 목 표

- 거대정당 독과점 정치체제 해체와 정치적 다원성 확보
- 비례민주주의 구현 선거제도 개혁

## □ 이행 방법

- 민주주의 기본소득 실시
  - 모든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정치인,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원의 정치기본소득 지급,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직선거당 1만원씩 추가 지급
  - 민주주의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정치 참여에서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
- 평등선거제도 도입
  - 국회의원 선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로 하여 표의 등가성 확보
    - 의석 할당에서 3% 봉쇄조항 없애고 <1/의석총수%>를 득표하면 1석부터 확보하도록 함
  - 지방선거
    - 광역의회는 모든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전면 비례대표제)
    - 기초의회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전체 의석의 10%인 비례의석 비율을 30%로 확대
    -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
    - 결선투표제 도입
- 정당정치 다양성 보장
  - 이종당적 허용 등 선거법 개정으로 공직선거에 2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연합을 구성하여 단일 정당으로 선거 참여하는 선거정당연합 허용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담-토론회에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등 개정

● 평등한 참정권

- 만 18세 미만 청소년 정당가입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폐지
- 선거운동시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특혜 폐지
-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정치적 자유 확대
- 시각장애인·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하는 제도 개혁
- 공직선거일의 유급휴일화로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들의 투표권 보장

● 주민자치의 확대·강화

- 주민투표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요건 완화와 실효성 강화
- 주민 제안이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설립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

● 지방재정의 분권 확대·강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배분 비율 축소-비수도권 비율 상향
- 지자체의 재산세 결정 자율성의 점진적 확대
-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24%에서 24.24%까지 인상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마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코리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코리아당

No.	정 책
1	국방, 안전, 외교, 통상
2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3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4	입법.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5	보건복지 (바이러스예방검역청)
6	보건의료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분업)
7	재경, 세무, 행정자치
8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9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10	교육부, 역사미래위원회청 설치

정책순위

1

국방, 안전, 외교, 통상

정책분야 국방, 안전, 외교, 통상

1. 통일: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

-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통일 헌법·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개성·장단·문산·철원 금강산·고성일대
-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 선관위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 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2. 북한왕조 종북좌파 타도 정책

- 친북한기업·정당정치세력·경제세력·위장국내재외노동자세력·종교사회단체·공공조직 축출로 국가적,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북진통일비용 재원 마련

3. 국방

- 핵무기, 수소폭탄 무력화 전략·전술·기술·개발
- 첨단 ICT 통합국방군 설립

#### 4. 안보

- 국가안보도청법제정-국내외를 총망라 한 도청기술개발
- 국가테러방비안전법 제정
- 대미안보 우호 강화
- 주변국 주적을 행한 안보전략 개발

#### 5. 외교 및 대외 통상

- 북진통일 국제외교 강화
- FTA등 통상외교 강화
- 내국인 우선보호 정책,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교민청 신설

####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6월까지

####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 정책순위

## 2

##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정책분야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 1. 경제: ICT 융합 경제학 확립,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아시아 공동체 주창

-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고대역사경제학
- 문화경제학
- 문명경제학
- 민권경제학
- 매국경제정책 폐기
- 과거죄자수기업인사면정책수립
- 기업인전용연금정책실시
- 부동산등재산평가제폐지 및 담보대출활성화
- 국민지식재산권등재사업
- 친원전정책으로 원자력산업기반 재건

## 2. 일자리, 노사, 기업

- 2/1 3/1 근무, 투잡 쓰리잡 허용
  - 복수노조제 및 귀족노조폐지, 대기업대주주 가족 기업세습경영배제
  - 건설(공장)현장업무방해죄 조직폭력 중강력 범죄로 징역10년형으로 단죄

## 3. 세금, 교통과태료 인하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등 절반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 교통과태료 절반 인하
- 고속도로 속도제한 시속 130킬로 허용

#### 4. 금융

- 서민금융 자본금 1000억원이하 소규모 금리 저리 은행 설립자유화
- 기준금리 0%달성, 금융이자 인하
- 서민전용(제2금융권) 기업전용(제1금융권) 분리운영
- 서민금융 신용·소득 증빙제도 철폐

#### 5. 생활경제

- 금융소비자원설립
- 긴급민생지원은행설립, 식량연료의료지원긴급센터설립
- 신용불량자사면복권, 은행부실채권 휴지화정책 수립

####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 목표

- 빈익빈 부익부 정책 폐지로 차별 없는 금융이용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국민재산을 축내는 정책 폐지와 정부와지자체 행정조직의 리모델링 및 구조조정으로 이행.

#### ▣ 이행기간

- 2006년6월부터 - 2026년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낭비되는 국가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달성

정책순위

3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정책분야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 1. 행정 : 국토부해체 분화, 허가권 10/1 축소 폐지

- 국토부-건설, 부동산, 교통기술, 국가검정기술, 환경기술 전문분야로 해체 분화
- 기초자치제 폐지. 광역화만 지방자치허용,
- 지방의회폐지, 광역화자치의회만 허용, 지역구선출폐지, 탈정당비례대표제선출
- 주식회사개념도입 수시 공무원퇴출 임용제 허용, 공무원신분보장제폐지
- 공무원 연금 폐지, 노동의 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제 도입
- 지방자치 허가권, 입안권, 조례 제정권 10/1로 축소
- 지방의회 의원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불허
- 지방자치조직 3/1축소, 구조조정으로 복지전문공무원 증원
- 소방공무조직 소방재난안전경찰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변경
- 시민사회종교 조직 정부,지방 사업 및 복지시설 대행 수행 금지

### 2. 사법

- 대법원개혁, 대법관확충, 법관보수 2배인상, 상고심사제폐지
  - 변호사시험제 수시제 변환, 대학미수학자대상 사법시험부활, 법대교수변호사자격증부여
  - 대법관 정수 33인이내 증원

### 3. 검경

- 검찰외 기소권 법원내 법원검찰, 선관위검찰 설치
- 경찰조직 개편, 수사전문청, 보안전문청, 정보전문청, 가정실종자수사전문청, 공수처전문청, 전문 경찰로 조직개편

#### 4. 국방

-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전통 육군 공군 해군의 전략 통합군부대 설치
-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 5. 감사 회계

- 감사원의 혁신.
- 회계감사원 설치
- 정부·지자체 감사직 독립청화

####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 목표

- 정부 지방 조직의 리모델링화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 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충당

####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정책순위

4

입법.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정책분야

입법.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 1. 입법 : 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 국회의원선출 지역구제 폐지, 정당권역별비례대표제로만 선출
- 각종법률폐기위원회설치
-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10년-국민직접선거
-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국회 상·하 양원제

### 2.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선거관련법 입법 거부권 행사권 부여
  - 선거관리위원 중 현직 판사 검사 전현 정당원은 제외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시도 급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선거로 선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도우미 직은 무작위 국민동원제로 실시한다.
  - 컴퓨터(전산)선거·개표금지, 선관위 독립적인 선거수사 및 기소권 부여
  - 선관위직원 경찰 검찰 법원 선거범죄 묵인죄 5년 징역형 입법
  - 각종노조, 위장당원, 각종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 선거업무참여 처벌죄 신설

### 3. 대통령

- 대통령이하 지방단체장 및 선출직 예비 후보자 상시 선거운동 허용
- 대통령 탄핵사유 명문화, 5년 중임 허용, 뇌물성정책 형사고발죄 신설.
-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 지방의회 정부예산 차별집행·뇌물성 처벌죄 신설

#### 4. 통일헌법

- 남한대통령 5년임기 중임제, 통일대통령 10임기 단임제 개헌
- 통일정부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가미 권력구조개편
- 통일헌법제정
-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임기1년 후 해산권 허용

#### 5. 헌법재판소

- 대법원판결 현재심사권 부여: 현재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및 30년이상 재직 법대교수로 임용제한
- 헌법개정심사권부여

####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정책순위

5

보건복지 (바이러스예방검역청)

정책분야 보건복지

### 1. 복지: 보건보복부의 해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 보건복지부를 해체한다.
- 의료보험관리청을 설치하며 낭비적인 무상건강진단을 폐지한다.
- 건강식품·식량자급종자 안전청을 설치한다.
- 복지공무·경제청을 신설한다.
- 신약개발 및 대체의학청을 신설한다.
- 국가병원·의료자원청 신설한다.

### 2. 여성

- 가정보호, 여성성침해, 여성인권, 여성 노동력 착취하는 양성평등 제도하의 여성정책 개선
  - 여성, 가정, 폭력실종수사처 설립

### 3. 아동

- 아동의 육아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기업탁아소의무설치운영제
- 무상복지를 지양하고 잉여인력 여성 노인 인력을 투입하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 자금으로 충당한다.

### 4. 가정

- 가정의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권한이 있다.
-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 국가는 하위계층에게 보살핌을 주어야하나 유노동 유임금제로 변환한다.

- 국가는 가정의 육아 교육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5. 노인

-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 해야한다.
- 복지센터에서 아동 여성 가정 교육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농임을 지급한다.
- 노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매입하며, 노인의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 □ 목표

- 복진통일, 흡수통일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사업 시행으로 재원 조달

정책순위

6

## 보건의료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분업)

정책분야 보건의료

## 1. 의료, 의약, 한의, 대체의술

- 대체의술을 허용한다

## 2. 국민연금 공공연금

- 국민연금 공공연금 통합
- 공공연금폐지

## 3. 첨단의료기술 합법화를 위한 의학제도 개혁

- 의학신기술처를 설립한다.
- 의과대학을 개편하고 의료인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의료, 의약, 한의, 한약, 대체의료, 통폐합 한다.
- 병의원을 모두 공공자원화 한다.

## 4. 의료인 육성

- 첨단화하는 의료발전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 연중시험제로 의료인을 다수 양성한다.
- 공공의료와 사적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한다.

## □ 목표

- 국민건강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 사회 조직 일반의 일반 사회의 낭비적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의료제도를 개편한다.

### ▣ 이행기간

- 2006년 6월부터 ~ 2026년 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의료보험 연기금등을 구조조정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 정책순위

## 7

## 재경, 세무, 행정자치

정책분야 재경, 세무, 행정자치

## 1.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국가도 회사다. 잉여예산제 실시)

-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시도에 설립 - 경제활성화대책(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할 대출을 받는다.
-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 교통정체 해결
-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 공공 청사 축소
-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 2.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 남북한, 중국, 일본과의 경색국면, 유럽 및 서양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보호정책 수립

## 3. 정당조직폭력배 척결: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 정당계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 분양가 상한가 통제
-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 현황과 문제점

- 낭비적 예산집행 / 신용제도, 소득증빙제도로 재산권행사제한,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해소, 재산세 2%인하로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 폐지

▣ 이행방법

- 정책변경

▣ 이행기간

- 2006년6월부터 - 2026년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재정 구조조정



정책순위

8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정책분야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 1. 교육제도

- 단계적 교육제 폐지
-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폐지
- 6년제 고등대학 직업교육제도 실시
- ICT 직업교육, ICT인문역사교육, ICT인성법률교육
- 교육자치제 폐지, 서울대학 및 문과대 폐지 기술과학개방대학원으로 개편
- 법과대학 부활, 아. 대학 미수학자 대상 사시부활

### 2.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 종친회 공영화 재산제 실시, 1인1족보 지원
-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 세습 문화 사업화 지원
-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 역사도서관 설치
- 역사 시험 복원
-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 3.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고대역사연구원설치

-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고대역사연구원 설치

#### ▣ 현황과 문제점

- 패권적인 국가 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종교우월주의 타파하여 아시아의 시원의 역사를 연구하여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 비폭력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소 발족이 시급함

#### ▣ 목표

- 전쟁을 향한 현실과 미래시대 대비

#### ▣ 이행방법

-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 개편한다.

#### ▣ 이행기간

- 2006년6월부터 - 2026년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문화재청예산전용, 동북아역사재단 재원을 사용함

## 정책순위

## 9

##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정책분야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 1. 시민 종교 사회

- 시민종교 봉사적 조직이 국가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념전파 정당정치 종교등의 선교를 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웃제 신설

## 2. 자유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제도화

- 성매매 자유촌 설치
  - 가.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 나.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 다.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 라.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 마.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 3. 정당 및 지역패권주의

- 정당원 또는 지지자가 지지대가로 행정허가 또는 사업에 불개입 조치
- 국회, 국회의원 행정권행사에 불개입 원칙 확립

## 4. 중앙정부지방행정청

- 국가사무지방자치행정에 위임업무폐지 :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청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한다.

## 5. 지방행정개혁

- 지방시군구단체장 및 의원은 선출직폐지 전까지 정당가입 금지
- 지방행정청은 복지 교통 등 허가관리직 폐지하고 봉사조직으로 변환한다.

▣ 목표 (현황과 문제점)

-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무너지는 가정보호, 국회입법

▣ 이행방법

- 국회입법 및 공청회

▣ 이행기간

- 2006년6월부터 - 2026년6월까지

▣ 자원조달방안 등

-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모교달성/ 민간자본 참여

정책순위

10

## 교육부, 역사미래위원회청 설치

정책분야 교육부, 역사미래위원회청 설치

## 1. 고대역사 : 복진통일, 흡수통일 정책에 기여되는 부분

- 진보이념으로 무장된 대남통일 전선 정책을 무력할 수가 있음
- 아시아의 원류 역사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동질성 회복
- 북한왕조 세습정권과 인간성 말살 정책, 독재정권 악습을 제거
- 세뇌된 북한 지도층의 재교육으로 민족문화 동질성 고취
-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문명 탄생을 모색
- 살인적인 종교간 갈등을 해결
-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에 다문화 이념 수용
- 해방전쟁에 동원되는 최소한의 살상을 수반 전쟁수행 방법연구
- 이념간 국가간 문화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다자간 동질성회복 방안 연구

## 2. 미래시대준비

- 언제까지 화폐교환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체제를 어떻게 비폭력평화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
- 인공지능에 인간성 및 인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세계인구는 폭발일로인데 어떻게 3000년 정도의 문명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 인간 생명의 경시로 인한 종교전쟁 패권전쟁 부의 집중화 정책을 어떻게 완하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독재경제체제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점적 노동착취와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연구
-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사회의 낙원은 가능한가

### 3. 이해충돌의 시대와 문명의 충돌시대 해결방안

- 북한왕조 중복좌파와 애국자유주의 입각한 보수주의와 싸움 해결 방안
-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독재 작당적인 민주주의 계획경제와 대한민국의 신진세력인 작당적인 부패한 진보 보수 주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이념의 재확립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의 당위성연구

#### □ 목표

- 북진통일, 흡수통일, 역사연구, 미래연구

#### □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 이행기간

- 2016년6월부터 ~ 2020년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동북아역사재단의 재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노동당



## 노동당

No.	정 책
1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일자리 보장
2	페미니즘 정치로 성평등 실현
3	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지역
4	지역 기후정의 실현
5	공공주택·공정임대료제로 주거권 보장
6	읍면동 공동가사돌봄센터 설치
7	공공주치의제·공공병상 확대
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9	교통권-에너지기본권 보장
10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정책순위

## 1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일자리 보장

정책분야 노동

## □ 목 표

- 지자체 책임으로 일자리 창출,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보장

## □ 이행방법

- 생활임금조례 제·개정 : △생활임금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생활임금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가 있는 지역은 적용대상 확대(지자체 투자·출연 기관, 지자체 사무 위탁, 공사·용역, 비정규직까지 적용대상 확대)
- 노동시간 단축조례 제정: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지자체 산하기관, 지자체 창출 일자리부터 적용
-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규제 : 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과도한 초과노동과 노동시간 유연화 규제
- 과로사 집중 업종의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마련
- 노동기본조례 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조 조직화 지원을 지자체 임무로 규정
- 안전한 일터 실현: △노동안전조례 제정 △지역산업안전보건위원회(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역 차원에서 구성) 구성
- 지자체 책임, 일자리 보장제 : △지역에 필요한 기후·의료·생명안전·돌봄 영역에 지자체 직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자체 책임 지역 일자리 창출은 기후위기 극복, 보건의료 확대, 안전사회 건설,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와 연결되는 프로젝트.
- 민간위탁 재공영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 지자체 산하기관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조례 제정
- ◎ 산업전환 고용안정특별조례 제정 : 산업전환업종(기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선고용-후교육으로 고용안정 보장

#### ▣ 이행기간

- ◎ 2022~2026

#### ▣ 자원조달방안 등

-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2

## 페미니즘 정치로 성평등 실현

정책분야 국방, 안전, 외교, 통상여성

### □ 목 표

- 여성에 대한 대한 구조적 차별과 여성혐오 철폐-페미니즘 정치 실현
- 일터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재생산노동(가사·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 공적 가사돌봄체계 도입과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중지,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

### □ 이행방법

- 일터 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 조례’ 제정 :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성평등 공시제 의무화(공시의무 대상에 임금 외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율과 복귀율 포함) △성평등 공시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위탁 사업 계약시 성평등 계약제 운영 △성별에 기초한 임금·고용형태 차별 금지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일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조례’ 제정 및 위반기업 처벌 강화
- 성평 등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지자체 행정기관에 성평등국 설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비전, 정책 마련 및 실행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도입: △성폭력 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구축(의료, 법률지원, 고용유지, 소득보장, 디지털정보 삭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성폭력 예방조치로 지역 내 초·중·고·대학까지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 통합지원체계 마련 : △이주·장애여성 배제없는 여성 재생산권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모든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무상 지원(생리대, 탐폰, 생리컵) △월경 장애, 난임 여성, 임신·임신중지·출산·갱년기 증후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임신 중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임신 중지 여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구축 △임신 중지 수술 지원금 제도 및 휴가 권고제 도입

▣ 이행기간

- 2022~2026

▣ 자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3

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지역

정책분야 기타

## □ 목 표

-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모든 소수자의 인권 보장

## □ 이행방법

- 인권조례 제정: △차별금지 △인권보호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 제정으로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로 전환
- 장애인권리 보장 :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자립생활 주택 지원) △장애인 노동권(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보장) 보장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저상버스 도입 확대, 특별교통수단 공공 운영) △지자체별로 '공적 장애인위원회'(장애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원/주택공급을 책임지는 단위(주택공사)/장애인 자립 지원기관)를 구성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 성소수자 권리 보장 : △생활동반자관계-시민결합 인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학교·공공기관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 이주민 권리 보장 : △선주민과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조례 제정) △접근 장벽 없는 공공서비스 지원

## □ 이행기간

- 즉시

## □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4

지역 기후정의 실현

정책분야 환경

□ 목 표

-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핵발전 가동 중단, 공공 재생에너지체제로 전환
- 기후위기 극복과정이 불평등구조 극복과 연결되도록 정의로운 전환 추구
- 탈탄소사회의로의 전환과정에 대한 노조와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구조 마련.

□ 이행방법

-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핵발전 중단 : △석탄화력 핵발전소 가동 중단 및 추가 핵발전 중단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핵취급시설 주변 주민안전 강화(각종 질환 조사, 주민 대상 인체 내 방사성 물질 정기 검사)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으로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체계(소비와 생산이 일치되도록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 △도시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한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점검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개발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공공기관, 신규건축물 등)
- 탄소배출 감축의무 전면 확대 : △지자체 산하 기관 탄소배출 감축 의무화 △지역 탄소 다배출 기업 규제장치 도입 △다배출 민자사업 중단(민자 LNG발전소 건설 등) △지자체 산하기관·대형건물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 부여 △탈탄소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자전거 도로와 생태친화 교통수단 보급망 확대
- 탄소중립녹색성장조례 폐기·기후정의조례 제정 : △지역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 제도, 정책, 지원책을 망라하는 조례 제정
- 농축산업의 생태적 전환 : △공장식 축산과 관행농업을 생태농축산업으로 단계적 전환 △농축산업으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농축산가구 지원 △공공기관부터 채식선택권 보장

- 정의로운 전환 지역시민위원회 구성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전달·소비과정에 대한 노동자주민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 제도화 △노동자와 지역공동체의 피해 방지 활동

#### ▣ 이행기간

- 2022~2026

#### ▣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 기금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5

공공주택·공정임대료제로 주거권 보장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
- 공공주택의 공급과 운영에서 지자체(공공)의 역할 강화
- 주거비 부담없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 민간임대료 통제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 완화

□ 이행방법

-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 : △공공택지 분양 금지 △불로소득 환수로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 지자체 책임 공공주택 공급 : △지역주택공사가 있는 곳은 지역주택공사의 역할 강화, 지역주택공사가 없는 지역은 광역 차원의 지역주택공사 설치로, 지역수요에 근거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 우선매수제도’로 기존 민간임대주택 매입방식으로 공공주택 확대
- 지역표준 공정임대료제 도입 : 민간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통제 및 인상 규제

□ 이행기간

- 2022~2026

□ 자원조달방안 등

- 불로소득 환수 조례 제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
- 종합부동산세 대폭 상향



정책순위

6

##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 설치

정책분야 복지

## □ 목 표

- 시장화된 사회서비스영역의 공영화
- 가사/돌봄을 통합하는 지역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 가사/돌봄노동 가치 인정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가사/돌봄노동의 탈시장화, 탈가족화, 탈성별화

## □ 이행방법

- 읍/면/동별 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 :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읍/면/동별 공공가사돌봄센터 설립 △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체계 구축
-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의 단계적 공영화 및 공공가사돌봄센터로의 통합
- 공공 유치원·어린이집 대폭 확대
- 가사·돌봄노동자의 직접 고용 및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보장
- 지역돌봄시스템의 민주적 운영 : 지자체-이용자-해당노동자-지역시민사회의 공동의사 결정과 민주적 운영체계 형성

## □ 이행기간

- 2022~2026

## □ 자원조달 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7

공공주치의제·공공병상 확대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사후 질병 치료보다 만성질환 등 질병의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영리병원 설립 저지, 공공병원·공공병상 대폭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계층별/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이행방법

- 공공병원·보건의료인력 확충 : △70대 중진료권별 빠짐 없는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공공병상 비율을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확대). △이를 위해 공공병원 신축, 공공병원 증축, 민간병원 매입 공공화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
- 무상의료·공공주치의제 : 무상의료·공공주치의제를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부터 시작하여 전지역민 무상의료·공공주치의제 도입
- 공공보건의료조례 제정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 주치의제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에 예산 편성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시도별로 보건의료노동조합·도민(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의료위원회’ 구성으로 지자체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이행기간

- 2022~2026

**▣** 자원조달방안 등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조성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8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정책분야 복지

□ 목 표

- 기업 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 보장
- 유해물질 배출과 피해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 책임 강화
- 민간에게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제 폐지

□ 이행방법

- 유해물질 안전조례 제정 : △유해물질 사용·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관리대상 유해물질 범위 확대, 작업장 화학물질 엄격 사용과 안전을 위한 지자체 관리 감독 강화 △유해물질로 피해입은 모든 주민에 대한 기업과 지자체 보상과 책임 강화 △생태오염·유독화학물질 생산시설 퇴출 및 규제 등
- 노동자·시민(주민) 참여 관리감독 운영위 구성: △유해물질 범위 규정, 관리감독, 유해물질 피해현장 정밀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 수행 △유해물질 안전 조례 실행 관리감독 △ 피해 보상 논의
- 민간에 맡겨진 산업폐기물 처리 공영화

□ 이행기간

- 2022~2026

□ 자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정책순위

9

교통권-에너지기본권 보장

정책분야 복지

### □ 목 표

- 공공 책임의 교통(이동권)·에너지기본권 보장
- 기후위기 극복,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교통중심체계로 전환

### □ 이행방법

- 공공·무상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권 보장: △공공교통 중심으로 각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공공교통체계 도입(통합공공교통체계를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통합)지역교통공사 설립) △버스 완전공영제 △무상교통 확대(마을버스/전체 버스 무상요금제 등 도입) △모든 공공교통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 :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 □ 이행기간

- 2022~2026

###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 중앙정부 재정 보조(국가재정을 OECD 수준에 맞춰 GDP의 50%로 확대)

정책순위

# 10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정책분야 정치

## □ 목 표

-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활성화
- 모든 지역민이 인간다운 삶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주민의 운동(투쟁) 활성화

## □ 이행방법

- 주민조례 청구제도 요건 완화 : 주민의 직접 참여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구제도 요건 완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 △지역 공정임대료 도입시 세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의 민주적 운영구조(지방정부-이용자-해당노동자-지역시민사회의 공동의사결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노동자·시민(주민) 참여 관리감독운영위 구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조치, 여성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도입과 운영시 여성의 참여 보장 △공적 장애인위원회 구성과 활동에에서 당사자(장애인단체)의 참여 △기후정의 실현과정에서 노동자·주민의 민주적 참여 제도화 등.
- 지역민과 함께 하는(함께 싸우는) 지역정치: 공약의 이행과 보완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운동(투쟁)없이 불가능.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의 공약은 지역에서 체제를 바꾸는 운동주체 및 운동의 형성과 연결되어야 함. 후보의 공약은 선거 이후 해당 지역 운동 형성과 지역민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것과 적극 결합시킬 것

## □ 이행기간

- 즉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녹색당



## 녹색당

No.	정 책
1	이웃과 함께 만드는 기후정의 조례
2	우리 동네 기후위기 안전망
3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공교통망
4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머무는 지역사회
5	충분한 휴식, 적절한 소득, 안전한 일자리



## 정책순위

## 1

## 이웃과 함께 만드는 기후정의 조례

정책분야 환경, 정치

## □ 목 표

- 다양한 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 전환에 필요한 기후정의예산 의무 편성
-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후행정부와 기후정의책임관으로 지자체의 기후대응 체계 구축

## □ 세부 이행 방법

- 다양한 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정의위원회 구성
  - 노동조합, 여성, 농어민, 청(소)년, 중소기업, 장애인을 균형 있게 포함한 위원회 구성
  - 기후정의 예산의 계획과 집행, 정의로운 전환 이행 정책, '녹색공간'의 보전과 관리 관련 개발 사업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의결권 확보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주민투표 권고
- 전환에 필요한 기후정의 예산 편성 및 기금 설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 활용하여 기후정의 예산 편성
  -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편성
  -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기후정의 기금 설치
-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추진 및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범위로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
  - 발전, 산업, 건물, 교통, 농축산업, 폐기물 등에서의 '부문별감축목표'의 수립
- 기후행정부와 기후정의책임관으로 지자체의 기후대응 체계 구축
  - 지자체장과 환경, 재무, 경제, 건설, 교통, 농업(또는 먹거리) 담당 부서 책임자로 기후행 정부를 구성, 부문별 감축 이행추진 및 이행현황 점검

□ 목 표

- 지역 재생에너지 자급률 높이기
- 채식급식 지원 조례 및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의무화
- 녹색건축물 확대, 그린 리모델링
- 폐기물제로 지역인프라 구축
- 지역 기후 일자리 기금 조성

□ 세부이행 방법

- 지역 재생에너지 자급률 높이기
  - 대형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시행
- 채식급식 지원 조례 및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의무화
- 녹색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 대형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시행
  -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 건축과정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평가
- 폐기물제로 지역인프라구축
  - 재활용 현장 점검 및 안정화 지원
  - 폐기물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간소화
  -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 작성 배포
- 지역 기후 일자리 기금 조성

정책순위

3

##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공공교통망

정책분야 교통, 환경

## □ 목 표

- 버스타기 좋은 시군구
-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 휠체어, 유모차, 보행자 위주의 도로 재구성
- 철도 중심의 국토 이동 및 물류 체계 확보

## □ 이행방법

- 버스타기 좋은 시군구
  -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 2025년까지 100% 전기버스 전환
  - 버스 무료 이용 복지 도입
  - 보편적 이동권에 기반해 교통망 취약지역 버스노선 확대 및 증차
-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
  -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
  -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 지역 자전거 수리 공방 거점망 만들기
- 휠체어, 유모차, 보행자 위주의 도로 재구성
  - 턱 없고 넓은 보행도로
  - 자동차 도로 다이어트
  - 내연기관 차 운행 제한
  - 도심 내 차량 최고 속도 제한 구역 확대
- 철도 중심의 국토 이동 및 물류 체계 확보
  - 광역 지역 교통 통합 운영 거버넌스 구축
  - 탈중앙화, 분산화 된 교통망 계획 수립
  - 버스 등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망과 연계

정책순위

4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머무는 지역사회

정책분야 주거, 환경

□ 목 표

-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
- 탄소배출 없는 양질의 적정 주거
- 다양하고 배제없는 공공임대주택
- 가족 다양성 보장
- 지역 인권조례 되살리고 제정하기
-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대
- 비인간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 세부이행 방법

- 세입자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
  - 계약갱신청구권 지역 모니터링
  - 동사무소 주거중간지원팀 설치: 세입자 권리 보호 및 분쟁 및 갈등 관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공동관리 컨설팅
- 탄소배출 없는 양질의 적정 주거
  -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정기 주거실태조사 시행
  - 세입자가 신청 가능한 주거환경개선 정책 및 주택, 에너지 효율화 정책(그린 리모델링)
- 다양하고 배제없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
  - 공공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가구구성상태와 상관없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에너지 효율 개선한 순환형 녹색주택조합 확대
  
- 지역인권조례 되살리고 제정하기
  - 인권기본조례 제정
  -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 이주민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촉진
  
- 비인간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 동물 서식처 위협하는 토건 사업 최소화
  - 동물혐오범죄 모니터링 전담 부서 설치 및 수사 연계
  -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체계 도입
  - 기존 축서 생추어리 전환 지원체계 마련

정책순위

5

충분한 휴식, 적정한 소득, 안전한 일자리

정책분야 노동, 복지

□ 목 표

-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돌봄과 존엄한 돌봄 노동
- 농촌 기본소득
-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향식 기후일자리
- 기초지역단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촘촘한 모니터링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돌봄과 존엄한 돌봄 노동
  - 돌봄노동 생활임금제 도입
  - 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생애주기형 복지 대신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돌봄
  - 인프라 구축
  - 돌봄노동의 범주 확대: 수리, 청소, 먹거리 가공 및 이동, 환경관리 등
- 농촌 기본소득
  - 만 15세 이상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월 50만원 지급
-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향식 기후일자리
  - 농업 및 먹거리, 자원순환경제, 재생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부문에서 인구 수 5% 이상의 일자리 창출
  - 대기업 및 특정 산업분야 유치 대신 지역 기후일자리 기금 조성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 기초지역단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 현장 실사 모니터링
  - 연 1회 사업장 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실태 조사 실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대한당



## 대한당

No.	정 책
1	정치혁명
2	종교혁명
3	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4	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5	문화혁명
6	국가 안보의 실질적인 선진화
7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10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 정책순위

## 1

## 정치혁명

## 정책분야 정치

국회의원의 명예직화와 국회의원 수를 120명 수준으로 만들어 국회의원의 개인 영달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애국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곧 입법기관으로서 청렴결백하게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상응하는 입안 상정이 모든 국민들이 의롭게 사는 방향 제시로 국민단결과 국력을 키워가는 상향적이며 자발적인 국민 동기유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과 악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필별을 기하는 법안으로 악은 아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권유린하는 북한 공산당 핵심부를 멸하거나 회개시켜 자유평화통일하여 세계 중심적인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사법부 판검사의 임준에 있어서 그저 암기식의 시험을 탈피하고 초등학교부터 사법고시 등 전 과정의 철저한 개인 신상을 제시하여 판검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판검사의 기소·재판의 책임은 영존하는 책임으로 명시하여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저가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사의 자격 강화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가난한 자들의 변호를 위한다. 이미 국민간에 소문이 남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례들을 고치기 위하여 돈,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엄벌하며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행정이 직능을 구별하여 유대 협의 관계 및 중앙통제체제로 재조정하여 강력한 행정부 시·도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하나가 되는 행정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행정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서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직의 모든 관리들은 급여외에 사취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국가를 위하지 않는 부정 부패한 자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공의가 전국 행정관서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백성들도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정책순위

## 2

## 종교혁명

## 정책분야 종교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이단, 기타 등으로 인한 개인재산침해와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경우는 이의 단체들을 즉각 철폐할 법령을 제정한다.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의 종교에 종교청을 두어 각 종단의 성경, 법령 등을 기준 하여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인의 재산침해, 불법 등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게 하여 종교계 내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 한다.

각 종단들 중에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물, 기부금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행정부에서 서민들의 복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특별재원과 안식처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독교(천주교 불교 포함) 내의 성직자라 함은 세상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나라 천국과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야 할 복음의 말씀을 받고도 부정하게 사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부자가 되고 교인들을 자신들의 종을 만들어 국가와 민족까지를 혼드는 경우가 자칭 크다는 교회들로 만연할 때에 성경 말씀의 법 밖에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목사들을먼저 종교 재판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가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 유럽의 악한 교회들로부터 도망친 기독교(청교도)인들이 미국 대륙을 개척하여 강대국인 미국을 건설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나라들은 세계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초대 제헌국회처럼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조국 통일이 되고 세계를 지배·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 판도는 표를 얻기 위하여 대형교회, 단체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형식적인 야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들과 성직자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 작은 자 가운데서 이순신, 유관순, 주 기철, 손양원 같은 순교적인 애국지사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기존의 정치가들과 종교계의 모든 자들은 회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대한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 세울 것이다.

정책순위

3

## 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정책분야 경제

자원과 재원개발의 증대에서부터 동네 주변 청소까지 전 국민이 이웃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가난할 때의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이 힘써 일하여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모든 국민 남녀노소가 일하는 풍토로 조성될 때에 최대의 경제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주간 6일 근무제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정책수립)

중소기업의 육성책 펴서 대기업화 또는 이윤창출 극대화하고 대기업들은 개인 영달이 아닌 국익과 국민복지 증대적인 기업화와 항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사회 및 생활복지 등에 그 이윤을 돌려야 할 책임을 준다.

과학기술 첨단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개설 운영과 육성책을 구체화하고 영재 교육을 실시하여 4차원적인 기업을 육성화한다.

외교정책은 경제정책을 수반하여 정치와 경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해외 주재 대사관 내에 국가 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 증대화, 시장개척 등을 겸한다. 또한 해외의 노동 시장을 개발하여 한국의 두뇌 인력, 첨단과학기술을 수출하고 1차 산업생산 요원들의 생산성을 후진국의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위의 1차 산업생산의 요원으로 노동 할 생각을 지닌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가난했던 1960~1990년대에는 어떤 일들이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오늘날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경제성장보다 더 행복하였고 이웃 간에 사랑이 있었듯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관리들도 최소 생계비로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최대의 행복지수는 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이웃을 위하여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비록 자신이 배고파 먹지 못하여도 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회풍토와 근로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은 저소득정책으로서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경제법안을 제정한다.

## 정책순위

## 4

## 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 정책분야 사회

국민간에 불신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첫째 의로운 교육의 부재요 정치인들의 기만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선도하는 사회정책과 바른 정치인들과 단체가 국민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증대 홍보한다.

마약, 도박, 매춘, 음란, 불법, 중복세력,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처법안 등과 각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 시설물들과 풀 한 포기라 아끼는 애국애족하는 마음과 국민 생활의 안정과 정서를 아름답게 하며 대중교통, 건강운동, 스포츠, 문화행사 등을 육성하여 안락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삼강오륜 윤리 도덕의 강령을 되살려 국가와 국민, 남과 여, 아내와 남편, 어른과 청소년, 친구간의 사랑, 노사가 하나됨, 이웃간의 사랑, 애국애족 등으로 전 국민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개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펼쳐간다.

삼면이 바다인 동·서·남해의 개발과 섬들을 개발하여 관광 자원화 내지는 수산자원을 극대화할 정책과 해양과학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발하여 과학화한다.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통일 후의 중국·러시아를 향한 영토권 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중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제헌국회, 이승만 초대정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수많은 학교, 병원, 교회들이 의로운 기초를 놓아 오늘의 발전을 기했던 것처럼 대한당은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 큰 부자들이 지닌 재화만으로도 전 국민의 평생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정당은 이를 계몽하고 모범을 보여서 자진하여 국가와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어야 한다. 큰 기업과 부자(재벌)에게는 과징세를 징수하여 사회적 평생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세금의 사용도 간접시설 확장보다는 국민들이 평균하게 잘 살 수 있게 한다.

농토와 해상을 보존 유지하되 수익성을 위한 대책 마련과 세계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치성을 높이는 개발을 한다.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을 과감히 개발하여 서민 주택정책과 공장시설 등으로 확장하여 간다. 특히 통일 후로 비무장지대는 국제자연 공원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정책순위

5

문화혁명

정책분야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우리 조상들의 문화·예술에 맞는 역사전통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의식주 생활을 계승 하고 전시회, 박람회 등을 열어서 국내외에 홍보한다.

세계문화, 예술 중에 가장 인간적이며 아름답고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선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창조적인 문화행사 등을 수입하고 비인간적이며 악을 초래할 문화 예술은 차단한다. 또한, 노인과 상관을 공경하는 예절문화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교육은 먼저 초등단계부터 부정과 거짓하지 않고 정직과 의를 행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거짓을 행하면 죽게 된다는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의를 행하게 한다. 또한 계속하여 악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은 별도 처벌 관리한다. 특히 전교조와 같이 학교 밖 정치 투쟁하는 자들은 전부 사직 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선행의 교육과 이의 행함에 등급한 신상명세서가 각 직장, 사회, 사법 행정시험에 50-90% 이상의 반영과 교사채용에도 엄별하고 대우를 하여야 한다.

애국애족교육, 반공교육, 창조교육, 과학교육과 삼강오륜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육과 강 령한 체력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공공의 언론은 악한 것들에 대한 보도보다는 선행과 발전적인 면에서의 언론정책을 추구하고 언론은 보도하고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부정한 부분을 정하게, 정한 것을 부정하게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반인륜, 반도덕적 동성연애, 짐승과의 교합 등은 엄벌에 처한다.

## 정책순위

## 6

## 국가 안보의 실질적인 선진화

정책분야 통일안보

그 동안 통일 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정책을 대화와 타협이란 각도에서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공산주의는 양민학살과 학대 및 인권을 유린하여 왔으며 우리가 아무리 저 악한 자들을 도와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력도발의 재화 등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관은 김정은에게 일체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보다 월등한 개인 및 육해공군의 군사훈련, 예비군훈련, 전국민 비상체제 군사훈련도 보강하여 실시한다. 곧 전쟁 도발 시 북한을 단번에 쳐부수고통일할 수 있는 전 국민의 투철한 정신무장을 하여야 한다. (숫자와 군사력 열세에도 아랍전쟁<제3차 중동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국내외로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척결한다. 이렇게 불순한 세력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법 제정도 필연하다.

군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등과 우방국 동맹을 강화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전쟁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은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보유에 강력히 반대하고 무력화할 방안을 찾아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북핵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며 통일을 진전시키는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을 비롯한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 이를 위 해 한미연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억제전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한 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



적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시 남북 정상간의 핫라인을 최우선 구축하여 한반도의 위기를 차단한다.

미래 전쟁과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첨단화, 과학화된 강군을 육성한다. 현대전의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구조와 전력구조,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국방 운영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정책순위

7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정책분야 윤리

정책, 성실, 공의, 진리를 위한 윤리강령을 전 국민과 대한당 당원들은 지켜야 하며 특히 대의원에 속한 당원들은 이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퇴하고 평당원으로만 존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자와 대의원들은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대한당의 강령에 준수할 것을 서약·서명한다

서문에 밝힘 처럼 사리사욕 사치하지 말고 공명정대 근검절약 최소치의 기본생활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의 예절과 윤리 도덕을 지켜 준수한다.

욕설 비방 모욕 등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타자의 부정을 책하고자 할 때에는 근거에 의거하여 사랑안에서 권면한다.

당원들 간의 고소 고발을 금하며 당내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심할 경우는 강제탈당 또는 처벌한다.

당직자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항상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과 당의 유익 편에서 일하며, 중앙당은 이의 신상필벌을 철저히 적용한다.

경로우대 효친사상을 국대화 한다. 특히 노인, 가난한 사람, 장애인, 어린이들을 각별히 보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와 정성을 다하여 도와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예 수그리스도, M.간디, 백결선생과 같은 본이 되자)

지위와 신분을 남용하여 사취 및 가족 지연 학연 등을 돕는 행위는 처벌하나 정당한 수고로 얻어지는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가능한 한 사취하지 말고 공의를 위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당직자 및 소속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공사를 구별하여 자금 사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 총무부에서는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당의 기밀을 유지 보안하여야 하며 사적 유용 등의 책임과 특별히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경우는 법적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치가 없는 선물, 서민적인 숙식의 접대 등은 허용하나 사치스러운 향응,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금지 및 처벌한다.

당내의 공직자 경선을 위한 세부규정(규약)을 마련하여 공적에 의한 선출제도를 확립한다.



정책순위

8

## 외교 안보 및 세계화

정책분야 외교

세계는 정보화 일일시대로 변화되었다. 기존 미국에 의존하던 외교정책을 초월하여 다국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각 나라에 설치된 대사관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방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를 지배할 경제, 문화, 정치의 외교정책을 수립 강화한다.

대사관 및 외교관이 파송된 나라의 경제, 문화, 정치, 군사의 교류증대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대사관에 공존시키고 파송하며 특히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럽과 서남아시아의 주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인력 증대 및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여 간다.

5대양 6대주를 주도하고 다스릴 교육, 군사훈련, 경제정책훈련, 생산능력의 증대, 언어 훈련, 각 나라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안보의 최고점은 북한 공산당 수뇌부를 속히 박멸하고 흡수 통일할 제반 정책들을 세 워 실천함이며, 타국의 부정합 윤리, 도덕, 문화 침범 등의 국내간섭을 막는 것으로 국방력 강화, 정신력 강화, 국민 개인의 애국 애족 하는 정신 배양이다. 이에 상응하는 국 가시책이 시급함에도 나라는 악한 정치인, 경제인들로 흔들리니 강력한 정부를 구축하여 부정부패를 먼저 뿌리 뽑아야 한다.

## 정책순위

## 9

##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 정책분야 근로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위급여 책정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노동쟁의 투쟁만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하게 하는 법안을 강력히 입법한다. (불법노조) 곧 일하는 단체의 각 사람들과 사업주, 노사가 함께 상벌을 갈음하는 기록을 유지하되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 하여 분쟁이 없게 하는 체제를 갖춘다.

행정부와 근로자들은 회사의 책임자(공직자의 장)가 근로기준법에 불법하는 행위,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사취하는 행위 등을 고발하여 노사(공무원 상하)가 서로 한가족으로 소득의 분배와 대우를 형편에 알맞게 하고, 노사는 또한 직장이 없거나 소외된 서민 들을 도와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경주할 법체계를 확립한다.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단위 행정관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 이, 저지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부와 정부의 예산투입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의 보강책으로 각 종교단체가 이것을 선행할 경우는 세금을 면제할 수도 있으며 단 이의 시행은 그 지역의 행정관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평준화와 서민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 일들이 허위, 사취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 한다.

대한당은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궁 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일터에서의 격차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 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 등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정 생산발전 관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채용을 기본으로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단 개인사업자와 회사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고용 등을 할 수가 있다.

## 정책순위

## 10

## 국민단합과 세계주도

## 정책분야 결론

대한당은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함처럼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중왕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을 진리와 정의로 세계주도 및 최강국 화하기 위하여 2016. 2. 15. 진리대한당으로 창당하게 되었으나 5천만 대한 민국과 8백만의 해외동포를 종교적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단합하기 위하여 2019. 11. 14. 당명을 개정하게 되었으니 대한당 당원과 이에 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유익과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성결 거룩하게 하고, 5천년의 유구한 백의민족 정신을 되 살려 불법한 행위들(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국민의 비윤리, 비도덕, 불신, 공산주의 사 상, 동성애 등의 악한 행위)을 척결, 회개하게 하고 대한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리 들을 학벌 재벌 지연에 무관히 의로운 사람들로 발굴하여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등 목숨 바쳐 애국애족한 선진들처럼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안보, 외교 등을 전반적인 국가부흥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대한당의 중진들은 무소유적인 정신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하여 세계를 주도할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1항) 대한당의 정치력을 1950. 6. 25. 남침하여 70년이 찬 이제까지 무수한 남침과 살 인 등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3김 북한공산독재체제를 멸하거나 해산시켜 북음평화통일하는데 둔다. (2항) 대한당은 사랑과 용서로 대국민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국가로 세워 나가며 신상필벌의 대국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3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굳건히 세워 각자가 노력하여 기업 및 서민경제개발 등으로 각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간 일한 만큼의 보상책을 강구한다. 따라서 불법기업, 불법노조는 척결하여야 한다. (4항) 시장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에 장애가 되는 재산상속세, 이중과세적인 종교세, 금융실명제, 수출입 관세 등의 세금과 법을 수정 폐지 또는 보완한다. (5항)사회, 문화, 교육 등을 국민 간의 사랑과 이해와 신뢰와 희생정신 등 주 님의 가르침대로 의(義)롭게 만든다. (6항) 작은 섬나라가 해가지지 않던 대영제국이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의 탄생은 당시 영국과 로마의 전 국민 정신이 한나님의 경외하여 군인들과 함께 최강의 대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애국정신이 세계를 지배했으나, 다시 이 사람들의 탐심과 사치로 망했듯이-, 5천년 한반도 역사도 그러했다 이로 대한당은 이의 본을 삼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순교자적인 자세로 국민정신과 국방력 등을 강화 단결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일하고 세계를 주도한다. (7항) 세 계주도란 의를 행하는 전체 대한민국의 단합된 지혜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대한민국이 주도-, 세계백성이 진리와 정의 안에서 천국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최종목적이 대한당의 결론인 것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자유통일당



## 자유통일당

No.	정 책
1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4차원 국가 완성
2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3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회복
4	한미동맹 강화
5	중·대기업 육성을 경제성장률 7% 달성
6	전군의 대학화를 통한 국방·교육 동시 해결
7	전교조해체를 통한 교육 정상화
8	주택공급 대폭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9	문화강국 대한민국 건설!
10	종교의 자유 철저한 보장

정책순위

1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4차원 국가 완성

정책분야 정치

□ 목표

- 헌법과 국가보안법 수호
- 이승만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과 박정희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계승
- 국회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 부통령 신설 국무총리 폐지
- 국회의원 2년 주기 교차선출
- 기초의회 폐지 ⇒ 자문위원회로 대체
- 비례대표제 강화(전체 의석의 3/1 이상)
- 결선투표 도입 (과반 득표자 부재시 15% 이상 득표자간 결선투표)
-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도입
- 국회선진화법 폐지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 인사청문회법 개정
  -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인준투표 도입 /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 재원조달 방안

- 특별한 추가 예산 소요 없음.



정책순위

2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정책분야 통일/외교통상

□ 목표

- 김정은의 노동당 정권 해체
- 노동당 정권에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 구출
- 북한정보원 설립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이북 5도청 활성화 / 북한 수상 임명
- 개성공단 규모의 남북 합작 공단 설립.
  - 파주, 철원, 연천 등에 공단 설립, 북한 주민이 근로하도록
- 상시 이산가족 생사확인 시스템 구축
- 이산가족 상황 정리화
- 국군포로 및 전후 납북자 송환
-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인권문제 해결 노력
- 남북협력기금 감사 강화
- 북한 이탈주민 망명정부 수립
- 통일대비 법제도 정비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등 한국 재산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정책순위

3

##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회복

정책분야 정치/행정자치

## □ 목표

- 2차대전 직후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반주사파법’ 제정
- 전교조 해산
- 민노총 해산

##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민노총, 전교조 등 중복성향 단체 해산
- 차별금지법 철폐
- 선교사학 특별법 제정
- 대안학교 신고제
- 대한민국 교과서 편찬
-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과 병행)
-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 이중국적제도 시행
- 주민센터별 담당 변호사 배치
- 국민연금 다변화
- 복지전달체계 단순화 및 복지정책 전면 재검토
- 해고요건 완화
- 출산장려정책 강화

▣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정책순위

4

한미동맹 강화

정책분야 외교

□ 목표

-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 북한 민주화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자유·민주·평화 원칙에 따른 통일외교 정책 시행
- 북한 핵폐기 및 북한민주화 지원
- 자원외교 정책 강화
- 교민청 신설
- 세계기독청 설치
-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기구 한국인 취업 확대
- 대일 관계 개선
- 한-일 대륙붕협정 연장
- 한-일 FTA 추진
- 한-일 군사협력 확대
- 한-대만 외교 관계 개선
- 쿼드 가입 추진

#### ▣ 자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 정책순위

## 5

## 중·대기업 육성을 경제성장률 7% 달성

정책분야 경제

## □ 목표

- 경제성장률 7% 달성
- 중·대기업 숫자 10배로 확대
- 16대 광역단체별 기업형 도시 건설

##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중·대기업 숫자 10배 확대
-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
- 법인세, 상속세, 보유세 인하
- 신성장 산업 육성: 바이오, 소프트웨어, IT
- 기업 경영자유 보장: 각종 지원법, 발전법, 육성법 폐지
- 주52시간 근무 폐지/완화: 노사간 협의에 의한 근무시간 자율 책정
-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 수도권 규제 완화
- 기업승계시 상속세 장기 연납 허용
- 16개 광역단체에 송도신도시 규모의 첨단기업형 도시 건설

## □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정책순위

6

전군의 대학화를 통한 국방·교육 동시 해결

정책분야 국방

□ 목표

- 북한 비대칭전력 대응 강화
- 4차산업 국방에 적극 도입
- 성차별 없는 국민개병제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전군의 대학화: 군복무중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수도권 미사일 방어체제 확충
- 4차산업 기술의 무기화
- 예비군 진급제
- 성차별 없는 국민개병제 (원하는 여성 사병 입대 허용)
- 북핵폐기 이후 전작권 전환 추진
- 예비군 훈련 확대
- 미국 MD 편입
-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 전역 후 경찰, 교사 특채
- 미국 핵무기 한반도 배치
- 핵 재처리 능력 확보

□ 자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자원 마련

정책순위

7

## 전교조해체를 통한 교육 정상화

정책분야 교육

## □ 목표

- 전교조 해체
- 주사파척결법,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 대학입시체제 개편

##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전교조 해체
- 학기제 개편
  -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1년은 진로 탐색 기간)
- 대학입시 단순화
  - 수학능력시험만으로 평가. 각종 수시입학제도 폐지
- 교육감 선거 폐지 후 임명제로 전환
- 개인별 진로설계 및 체험학습 지원
- 대안학교, 국제학교 규제 완화
- 자사고, 외고, 국제고 확대
- 교육감 권한 축소. 지방의회 권한 강화
- 교육부 폐지

## □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정책순위

8

주택공급 대폭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정책분야 건설교통

□ 목표

- 주택공급 확대
- 간선교통망 확충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대도시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 한-일 해저터널 건설
- 주택 규제 대폭 철폐
- 광역단체별 첨단 신도시 건설
- 부동산규제 대폭 완화
-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 저소득층 대상 주거바우처 지원
- 대도시 도심 용적률 상향
- GTX 건설 확대

□ 재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정책순위

9

## 문화강국 대한민국 건설!

정책분야 문화관광

### □ 목표

- 한국 문화 세계 수출
- 영어 제2공용어화

###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영어를 제2 공용어로
- 청년예술인 지원
- 해외문화홍보원을 세종학당으로 편입
- 국립번역청 설립
- 엘리트스포츠 지양. 사회체육 중심으로 전환
- 주민센터의 문화예술센터화
- 스크린쿼터 폐지

### □ 자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정책순위

10

종교의 자유 철저한 보장

정책분야 문화

□ 목표

-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신우회 부활
- 신학대학 정상화
- 기관 목회(원목, 경목, 향목, 교목, 군목, 법원, 검찰 등) 정상화
- 종교청 설립

□ 자원조달 방안

-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통합, 불요불급·전시성예산 정비,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자원 마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진보당



## 진보당

No.	정 책
1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
2	농자재 반값, 농민수당 2배로 농업대혁명 실현
3	청년·청소년 일자리 및 기본생활 권리 보장
4	성평등 및 차별 없는 지역사회 실현
5	상생의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6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7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실현
8	기후위기 극복·생태중심 사회 실현
9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 전면 실현
1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실현

정책순위

1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

정책분야 노동

### 1. 노동중심 지방자치 노동부시장(지사) 신설

● 목 표

- 광역시도별로 노동 행정을 총괄할 ‘노동부시장’ 직제 신설

● 이행방법

- 광역자치단체 노동 행정 총괄할 ‘노동부시장(지사)’ 직제 신설
- 노동전담부서의 기능, 인력, 예산 확대
- 광역자치단체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노동 행정의 정책 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 2.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 목 표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조례 마련 및 적용 범위 확대

● 이행방법

- 노동기본권 강화(일할 권리,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문 기구에 노동조합(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지역본부) 참여 명시 / 노정 협의 정례화·안정화
-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보호, 노동자 참여 보장 조례 및 노동자 지원기구 제도 마련 및 강화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사회권으로서 노동3권 포함. 노동인권교육, 노동 인지 행정 확산
-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에 지방정부 사용자책임 이행현황 포함
- 지방정부 경제 및 정책 평가 기준에 노동권 강화 항목 반영
-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책임 의무 제도화
- 공공행정,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용자로서 지방정부 책임 강화

### 3. 노동중심 도시(유니온시티) 시행

#### ● 이행방법

- 노동중심특별도시로 서울, 울산, 창원, 광주 등 시범 운영도시 선정
- 도시 정부가 노동환경, 노동시장, 임금 등의 기준을 설정, 노동자 적극 보호
- 비정규직도 노조 할 권리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디.노동안전망 구축
- 임금체불 신고센터 설치, 노동 행정 지방분권으로 근로감독 권한 중 임금체불 조사 권한 지방 정부 이양

### 4.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위탁 폐지

#### ● 목 표

- 지자체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지자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자치단체 협약 체결

#### ● 이행방법

- 지자체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 민간위탁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민간위탁 직접고용 전환 심의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움.
  -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하였던 관리 인건비와 10% 이윤보장 등의 예산을 노동자 직접고용 재원으로 전액 투자하도록 함.
- 지자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자치단체 협약 체결
  - 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자는 공공부문 서비스업무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공동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복무.

### 5.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 ● 이행방법

- 하청노동자 생명·건강 지킬 권리, 적정임금·휴식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명시, 하청 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하청노동자 계약실태·계약조건·노동환경 등 정기적 실태조사, 하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사회적 안전망구축·소득 및 주거 지원·사회보험 가입 지원·산재 예방 등 사업 진행, 하청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교육, 법률지원,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등

## 6. 산업안전 3법 :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는 지방정부

### ● 목 표

- 산업안전 3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개정)으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전면보장
-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 이행방법

-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21년 현재 광역 13곳 제정. 전국 확대. 공공 및 민간 전면 적용, 지자체 책무 의무화, 사업주 협력 강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안전조사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강화)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감독 및 산재 은폐 추방
  -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하는 지자체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정책순위

2

농자재 반값, 농민수당 2배로 농업대혁명 실현

정책분야 농림해양수산

1. 농자재 반값 공급 실현 :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 목 표

- 농자재 폭등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없고, 농업소득 감소가 없도록 지원대책 마련

● 이행방법

-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 영농 필수품목 국가 관리제 도입
- 농민기본법 제정과 필수농자재 지원 법제화

2.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두 배로! :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

● 목 표

- 지자체에서 모든 농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실현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두 배로 지급.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으로 농민수당법 제정, 매월 150만원 지급

● 이행방법

-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모든 농민에게, 여성농민 배제 없이 모든 농민에게 지급
-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
- 농민수당 제도 운영에 농민참여권 보장

3.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 농지관리 조례 제·개정

● 목 표

-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지보전과 농지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여 비농가 소유 농지는 농민에게 장기 임대



● 이행방법

-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 '농지관리 강화 및 농지보전을 위한 조례'
- 농지법개정 : 투기농지 국가 매입, 청년농민 및 현지 경작 농민에게 장기 무상임대
- 비농민소유 농지 국가 매입, 비농민 투기 농지 몰수로 3천평 농지 청년농민에게 무상 임대
- 농지법 개정으로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법제화
- 농지임대차 신고의무제, 농지 임차료 상한제, 농지은행을 농지관리청으로 승격

**4.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개정**

● 목 표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및 공공부문에서부터 농산물 가격 보장

● 이행방법

- 지자체별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재·개정
- 기금 마련을 통한 예산 확보, 최저가격 결정에 농민단체 및 생산자 참여 보장
- '최저가격보장 위원회'구성, 농민생산자 참여 필수.
- 최저가격 대상 품목, 설정 기준, 지원방식, 시기는 최저가격 보장 위원회에서 결정
- 농협을 통한 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 50%로 확대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5. 농어촌 생태계, 공동체 파괴 없는 에너지 공영화 :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추진 조례**

● 목 표

- 농촌주민 동의 없는 개발사업 중단,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실현

● 방 법

- '농어촌지역 보호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농어촌 파괴 중단
-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추진 조례, 농어촌지역 주민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 기업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 국가책임 신재생에너지 실현하고 기간산업으로 육성,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영화
- 농촌 마을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6.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 농업재해보상 지원조례

### ● 목 표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대책 마련

### ● 방 법

-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조례」 제정(대전, 영암군, 양평군, 안동시, 봉화군, 남원시 사례)
-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인상, 농어업재해 거점 병원 설립
- 농업 산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농업 산재를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으로 만들어야 함.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개인 부담 전액 지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농업재해보험 현실화 - 피해율 산정 현실화, 피해조사에 농민참여
-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 강화, 농기계 안전기준 강화
- '농작업 안전보장제' 도입으로 공적 보상체계 강화

정책순위

3

청년·청소년 일자리 및 기본생활 권리 보장

정책분야

청년·청소년

### 1. 청년일자리 보장제

● 목 표

- '청년일자리 보장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및 완전 고용 달성

● 이행방법

- 지자체의 '일자리 보장제' 실시, 청년일자리 보장 우선 실시
  - 일할 능력 있고 일할 의지 있는 모든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 돌봄 국가 책임 전환 등 사회서비스 분야, 재생에너지 생태 전환분야, 사회연대 경제 등과 연계 한 청년 일자리 발굴
  - '청년 일자리은행' 구축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 상시 제공
  - 지역별 예산 제약 고려하여 청년 장기실업자 대상 우선 추진

### 2. 청년농민 30만 육성 : 청년농민 농지임대, 맞춤형 행정지원

● 목 표

- 청년농민 30만명 육성, 청년농민 맞춤형 행정 지원 강화

● 이행방법

- 지자체 공유지 및 투기 농지 몰수로 청년농민(신규 청년농 포함)에게 무상 임대
- 청년농민 정착지원금 일시 3억원 지원
- 청년농민 전담 부서 및 전담인력 설치,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 3. 알바도 '실업급여'

● 목 표

-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준비 환경 보장

● 이행방법

-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이직 준비급여를 받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함.

#### 4. 청년스트레스센터 설립

● 목 표

-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

● 이행방법

- 지자체에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전담센터인 ‘청년스트레스 센터’ 건립
- 청년정신건강 정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청년 정신건강특별대책 수립

#### 5. 청소년 기본생활 보장

● 목 표

- 청소년 기초생활 보장

● 이행방법

- 모든 청소년에게 연간 360만원 지원(생활임금 변동 반영)으로 기본생활 보장
- 모든 청소년에게 바우처가 등록된 청소년증(청소년 프리패스) 발급
- 청소년 프리패스를 통해 무상으로 대중교통, 문화체육시설, 의류 등 청소년 기본생활 지원

#### 6. 미래정책 공동협의기구 설치

● 목 표

-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사결정권한 강화

● 이행방법

- 지방의회에 미래정책 공동협의기구 설치
- 미래정책 청소년 사전 의무 심사제도 시행
- 청소년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 7.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및 고졸 노동자 일자리 보장

● 목 표

-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으로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 보장

- 고졸노동자 일자리 보장 및 노동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이행방법

- 지자체 청소년노동보호 조례 제정
  - 청소년 노동 감독 강화
- 고졸 노동자 일자리 보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공공부문 고졸 노동자 의무 채용 30%로 확대

## 정책순위

## 4

## 성평등 및 차별 없는 지역사회 실현

정책분야 여성(장애인·소수자)

## 1. 지방자치단체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

- 이행방법
  - 지자체장 산하에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 모든 지자체에 성평등정책전문담당관제 도입과 성평등 부서 설치
  - 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위원회에서 특정 성이 40% 미달인 각 위원회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

## 2.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노동공시제' 실시

- 목 표
  -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평등노동공시제 실시
  - 지자체별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성평등노동공시제 시행
- 이행방법
  - 지자체 채용성차별 금지 제도 마련 -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투자출연기관까지 신규지원자, 경력지원자, 서류합격자 포함 지원부터 최종합격까지 성비 공시
  -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 고용단절방지 바로 복지제도 시행 -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공시
  - 사회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여성대표성 제고(부서별 노동자성비, 승진자 성비 공시 및 해고자·조기퇴직자·정년은퇴자 성비 공시)

## 3.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및 지원조례 제정

- 목 표
  -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이행방법
  - N번방 방지법 강화, 젠더폭력 대응강화, 파트너폭력 방지법 제정, 스토킹 처벌법 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지자체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 마련

#### 4. 여성 건강권 보장, 성평등한 보육·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

##### ● 이행방법

-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 설립 :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관리, 폭력피해여성 치료·재활·심리치료
-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논스톱 지원 및 남성육아할당제 도입

#### 5. 장애인 차별 해소

##### ● 목 표

-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
-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주거권·정보통신권 보장 및 지원

##### ● 이행방법

- 지자체별 장애인 탈시설 및 지원 조례 제정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의무고용 확대
-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시외 및 고속버스·지하철 및 철도·인도 등 이동권 전면 보장
- 뇌병변 장애인 종합지원·발달 장애인 권리보장·감각(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 권리보장·장애인 주치의 제도 강화·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 ·여성장애인 재생산 권리보장

#### 6. 이주여성 인권보장

##### ● 이행방법

- 모든 비자 유형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여성 통합지원시설 마련
- 이주여성 노동자 주거안전 확보
- 가족에 종속된 결혼이주민 체류 제도 개선과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이주여성 및 이주남성과의 출산, 임신 중지 등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7. 성소수자 인권보장

##### ● 이행방법

- 양성평등→성평등 용어 수정 : '양성평등기본법' 명칭 수정, 정확한 용어사용
-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인권조례 제정 및 강화

- 공공기관 성 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
-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상담, 지원, 의료기관 연계(양육자 동의여부 관계없이 지원)

## 8. 동물권·채식권 보장

- ◎ 애완·보호의 관점을 넘어서 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정책순위

5

상생의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분야 경제 (소상공인·재벌개혁)

### 1. 임대료 부담 경감, 임차상인 보호

#### ● 목 표

-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 상가임차인 보호

#### ● 이행방법

-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 지방정부 분담
-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3기 연체자 보호(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 상가임차인 보호
  -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환산보증금제 폐지
  - 임대료 상한제 실시(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 철거·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퇴거 보상금 지급 보장

### 2.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부채탕감

#### ● 이행방법

-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재조정 실시
- 한국형 PPP 도입(임대료, 고용유지 인건비 등 정비 상황 감면 제도)

###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 ● 목 표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장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보장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근절

● 이행방법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노동조합 결성 보장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

**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 이행방법

-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점규제법 제정
- 중개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일방적인 해지 등 부당거래거절의 규제
  -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상권, 단체교섭권 부여

**5. 골목상권 활성화**

● 목 표

- 대자본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침해 억제
- 골목상권 활성화

● 이행방법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대규모 점포 건축을 포함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 입안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 환경 검토 의무화
- 1만 m<sup>2</sup> 초과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 생계형 적합업종 침범 대기업 처벌 강화
-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6.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기업 보호**

● 목 표

-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 이행방법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 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 시도지사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조사 조정권 부여, 하도급감독관 설치
  - 징벌적 손해배상 3배에서 10배로 상향, 적용되는 위반사항 범위 확대

## 정책순위

## 6

##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분야 건설교통

## 1. 시도별 장기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 목 표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 ● 이행방법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정(20%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제도 마련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택선매지역 지정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
- 공공임대주택 유형 단일화,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 조기도입

## 2. 저소득층 무상주택·주거비 지원

## ● 목 표

- 주거급여 수급자 무상주거보장,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 ● 이행방법

- 주거급여수급자 임대료 0원(무상주택 현실화)
- (중위소득60%이하)저소득층 전·월세 부담 30% 상한제(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 3.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 목 표

-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결

## ● 이행방법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
-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건설원가대로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

-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4. 청년월세 10만원 청년 생애 첫 독립주택

##### ● 목 표

- 청년들의 생애 첫 주거 독립지원

##### ● 이행방법

- 대상 : 무주택청년, 취업, 취업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공공거주를 희망하는 2인 이상의 청년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을 통해 임대료 자부담 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 월세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주택(공공기관이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5. 공공교통 공영화 및 무상교통 확대

##### ● 목 표

-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및 무상교통 확대

##### ● 이행방법

- 외주화·민영화 금지 및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기본권 보장 등 교통기본법 제정
- 도시철도 민자사업 중단 및 재공영화
-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 택시 산업 공공성 강화

#### 6.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교통체계 구축

##### ● 목 표

-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녹색 교통 실현

##### ● 이행방법

- 도심 주차면 제한으로 승용차 진입 억제 등 도로교통량 감축
-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트램 및 BRT, 공공자전거 확대 등)
- 자동차 운행 환경기준 강화와 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적 이용
- 버스/도시철도 통합완전공영제로 공공교통 분담률 강화

## 7.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 ● 목 표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교통약자 무상교통 실현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지역편차 해소 추진

### ● 이행방법

-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광역과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한 공공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별 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 통합 및 이용요금 일원화, 24시간 운영 지원

정책순위

7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실현

정책분야

교육보건복지

### 1. 대학무상교육 실현

● 목 표

- 2025년 대학무상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고등교육재정 확대(GDP 1.2%)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2023년 반값 등록금-24년 75% 무상화-25년 대학무상교육 원년
  - 가치분 소득 기준 표준등록금 산출
  - OECD 평균 수준 국고 지원 확대
  - 사립대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공영화 실현

### 2. 대학서열화 폐지 및 입시 폐지

● 목 표

- 대학서열화 폐지 및 입시 폐지

● 이행방법

-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성으로 대학서열화 폐지
- 사립대의 국공립 전환
- 입시 폐지와 절대평가 중심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전환

### 3. 특목고 해체

● 목 표

- 특목고, 자사고 전면 폐지와 고교평준화 재정립

● 이행방법

- 특목고, 자사고 전면 폐지
-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로 구분

#### 4. 공공의료기관 확충

- 목 표
  - 공공병원 확대로 의료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 공공병원 미설치 중진료권 30개지역부터 공공병원 신축
  - 민간병원 공공인수
  - 일차 의료기관으로 동네마다 공공동네의원 설립

#### 5. 어린이병원비 무상 실현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목 표
  - 0~14세 어린이병원비 무상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원
- 이행방법
  - 0~14세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당하여 무상의료 실현
  - 9개 권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

#### 6.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목 표
  - 초등학생부터 주치의제도로 의료 자원 효과적 활용 및 국민건강 체계적으로 관리
- 이행방법
  - 학교관할 지역의 보건소나 공공의원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학교로 파견하는 방식
  - 임신-영아기 방문건강관리사업 선도적 추진
  - 민간의료기관도 참가하는 광범위한 주치의제도 시행

#### 7.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 목 표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 이행방법
  - 지자체에서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및 지원으로 성평등 육아휴직 정착
  - 지자체 직영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 지원으로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 20~40대 1인가구 주민센터 연계형 맞춤형 돌봄 마을 노인돌봄 시스템 통합 구축

## 8.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 ● 이행방법

- 특정인 1인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의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정책순위

8

기후위기 극복·생태중심 사회 실현

정책분야 기후·에너지·안전

1. 원전 백지화 탈원전 실현

● 목 표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 핵발전 규제 강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 이행방법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 핵발전 규제강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과 별개로 인근 기초·광역 정부에게 재가동 동의권, 가동중지권 등을 부여하도록 법제도 정비
  - 지역 및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화

2. 발생지 처리원칙에서 폐기물 처리

● 목 표

- 직매립 금지로 매립비율 최소화
-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이행방법

-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 재정
- 지역사회 재사용-재활용 인프라 구축

3.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 이행방법

-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 공공기관, 노후주택, 임대주택 의무화
-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 폭염·한파 등 취약계층 지원 / 자연재해 위험지구 환경 개선 사업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통한 세입자 권리 보호

#### 4. GMO·방사능·농약 제로 안전 먹거리 실현

##### ● 목 표

- 지자체별 먹거리 체계 토대 구축
- 공공급식 GMO·방사능·농약 제로 실현

##### ● 이행방법

- 지자체별 먹거리 체계 토대 구축
  - 로컬푸드 증진, 도시농업 계획 등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취약계층 대상 지역 농식품 연계, 지역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등 연결시스템 구축

#### 5.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지자체 매입

##### ● 목 표

- 도시공원 소멸 방지

##### ● 이행방법

-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매입
  - 지방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보
-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 금지
  -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 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 6. 미세먼지 없는 맑은공기 도시 조성

##### ● 이행방법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산업단지 배출 미세먼지 감축
- 지역형 미세먼지 관리센터 도입 및 저감장치 설치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개선 및 강화
- 미세먼지 상시노출 노동자 보호 강화
- 자동차 운행의 환경기준 강화와 전기차 보급 및 친환경적 이용
- 보행/이동권의 주류화

## 정책순위

## 9

##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 전면 실현

정책분야 행정자치

## 1. 지방분권 헌법 개정

## ● 이행방법

- ‘지방분권’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 ‘보충성의 원칙’ 명시 : 지역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 사무처리,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 담당
-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보장, 자주재정권 보장

## 2.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 이행방법

- 광역의회 전체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할당한 뒤,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를 빼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광역의원 정수 확대

## 3. 기초의회 3~5인 중선거구 확대

## ● 이행방법

- 현행 2~4인까지 뽑는 제도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 4.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및 ‘공동세’ 신설

## ● 이행방법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 지방소비세를 2023년 25.3%에서 향후 35.3%까지 확대
  - 지방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 공동세 신설로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재정력지수 120% 초과한 지자체의 초과세수를 공동세 재원으로 함.
  - 재정력지수 낮은 지자체를 공동세 재원을 통해 재정을 보전해 줌.

## 5. 추첨식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확대

### ● 목 표

- '주민자치회' 입법화로 주민자치 확대

### ● 이행방법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및 업무 강화
- '추첨식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화 방안 강화
  - 동 단위에서 50~100인 위원 추첨으로 구성 /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및 50% 실현 목표로 구성
  - 만39세 미만 청년을 15%이상 구성

## 6. 청년 및 비정규직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 ● 이행방법

- 청년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 확대 / 교육 이수 보상제 및 유급제 실시로 전문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 주민참여예산 사업영역 및 예산 규모 확대 / 예산 편성 권한 확대

## 7. 시군구 단위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확대

### ● 이행방법

-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추진하고 자치경찰 사무 확대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서 시군구 단위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확대
-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 특정 성 60% 초과 금지 및 50% 목표로 구성 / 인권전문가 추천 의무화
  - 상임위원의 사무국장 겸직 폐지 / 경찰 출신 위원 비율 제한 및 상임위원 선임 배제

## 8. 지방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직선제 실시

### ● 이행방법

- 지방법원장 직선제 실시
  - 지방법원장을 주민 직접 선출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및 주민의 법원행정 참여 기회 보장.
- 지방 검사장 직선제 실시
  - 검찰의 막강한 권한 분산 및 주권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실시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실시 및 확대와 동시에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현

정책순위

1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실현

정책분야 통일외교

###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 ● 목 표

-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구조를 깨끗이 걷어 내므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 ● 이행방법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계획 발표
- 전시작전통제권 즉시 환수
- 사드 철거

### 2. 사드 전면 철수

#### ● 목 표

- 사드 추가 배치 반대
- 사드 전면 철수

#### ● 이행방법

- 사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와 자재 반입 금지
- 사드체계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실시
-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의 백지상태 재협상과 기존 사드체계 전면 철수

### 3.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추징

#### ● 목 표

- 반환 미군기지 원상복구를 위한 환경오염 정화비용 추징
-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 생화학 세균실험 프로그램 ‘주피터 프로젝트’ 전면 중단 및 취소

● 이행방법

- 오염 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전면 무효 선언 및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전면 공개
- 현재까지 사용된 기지 오염 정화비용 추정 및 구상권 청구
-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반환 미군 기지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규정 명시
- 생화학 세균실험 프로그램 ‘주피터 프로젝트’ 즉시 폐기 및 전면 백지화
  -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의 반입에 대해 한국 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필요한 경우 반입 금지
  -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한미 당국의 회의결과 공재, 주민 알 권리 보장

**4.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

● 목 표

- 2015년 한일합의 무효
- 피해자의 참여와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 도출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체계적 진상규명

● 이행방법

- 2015 한일합의 무효,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합의 도출
  -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된 구두발표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성격이 아님.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체계적 진상규명
  -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사실 조사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통일한국당



## 통일한국당

No.	정 책
1	세계 5대 경제강국
2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3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5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6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7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강국
8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9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10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 정책순위

## 1

## 세계 5대 경제강국

정책분야 재정, 경제

## □ 목 표

-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 이행방법

-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일류기업의 육성
-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의 통합 완성
- 과학기술 혁신과 친인류적 경제성장 전략 추구
- 세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
- 경제운용방식의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균형 및 조화의 추구하고 경제적 약자의 보호
- 공정경제 시스템과 대기업의 책임 경영
-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
- 항공우주 산업 육성 및 우주시대의 주도
- 1차산업 육성과 식량안보 강화

##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2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통상

□ 목 표

-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 이행방법

- 한반도 비핵화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유지
-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 육성
-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 및 자주국방 능력 강화
- 동맹·우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방위산업의 효율화 및 안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군복무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의 확대
- DMZ세계평화지역 선포 및 국제평화기구 창립
- 한반도 주변 국가와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3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정책분야 복지

### □ 목 표

- 따뜻한 복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이행방법

- 국민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
- 더 큰 자유와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 가족애(家族愛) 증진을 통한 가족사회안전망 강화
- 아이는 웃고, 청년은 희망차고, 중년은 당당하며, 노인은 걱정없는 사회
- 지역·계층·세대·남녀 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
-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조성
-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 100세 시대 맞춤형 정주안정을 통한 행복한 사회
- 이산가족의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하는 사회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

###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4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정책분야 보건의료

□ 목 표

-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행방법

-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와 유통환경 조성
- 쓰레기 및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
-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시대 및 친환경 에너지·신기술 산업체제로 전환
-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핵, 범죄, 전쟁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질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일자리 상실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5

##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 목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 이행방법

-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건설과 이해충돌의 방지
- 신뢰와 믿음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 공정과 정의를 통한 한마음 통합사회 실현
- 공공 부문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 조성
-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와 권력의 이동
-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실현
- 정치적 특혜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6

성숙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목 표

-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행방법

- 법치에 앞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실현
-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상생의 시대 추진
- 주민자치권 강화와 주민자치의 시대 추진
- 국가권력의 독립성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국회의 개혁
- 행정의 개혁으로 일 잘하는 정부 추진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의 개혁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효율성 도모
- 디지털시대와 국가 법률시스템의 개선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7

##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강국

정책분야 교육, 인적 자원

## □ 목 표

- 미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 이행방법

- 국가발전의 근본토대인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완성
- 사교육 효과 및 공교육의 정상화
- 공평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의 독립성 강화
-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 실현
- 과학인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구축
- 교육현장의 자율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혁신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안전망을 통한 교육정의 실현
-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교육강국 부상

##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8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정책분야 문화, 관광, 스포츠

□ 목 표

-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향유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이 되겠습니다.

□ 이행방법

- 문화·체육·예술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육성 및 창작지원시스템 구축
- 국민생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산업 육성
- 지속적인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 문화 소비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확대
- 자생적인 문화·예술·체육의 생태환경 조성
-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확대
-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정부정책 참여 확대
-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 동질성 회복
-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한류의 세계화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9

##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정책분야 외교통상

## □ 목 표

-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가 되겠습니다.

## □ 이행방법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인류문명 선도국으로 부상
- 비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 강화
- 국제개발협력과 국가전략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확산
-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 활성화
-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국제분쟁 및 평화에 대한 기여 확대
-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한반도 통일시대 주도

##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정책순위

# 10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정책분야 통일

## □ 목 표

- 통일한국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이행방법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로드맵 완성 및 실천
-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제도의 구축
-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재원 확보
-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및 북한주민과의 신뢰 개선
- 통일운동의 확산과 국론 대통합
- 한민족의 통일역량 강화와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탈이념 선언 및 중도실용의 정치 실천
- 남북한회담 정례화 및 남북한 신뢰 구축
- 아시아공동체 추진을 통한 통일한국 완성
- 통일한국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 이행기간

- 2022년 ~ 2025년

## □ 자원조달방안 등

- 기존 예산 활용
-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
- 법률 및 제도 개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한류연합당**



## 한류연합당

No.	정 책
1	한반도 프로젝트
2	국가 대변혁
3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4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5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6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7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8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9	예방 시스템 구축
10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 정책순위

## 1

## 한반도 프로젝트

정책분야 경제, 통일, 외교통상, 문화

## (1) [한반도 프로젝트] 정의

-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 (2) [한반도 프로젝트] 구상

-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는 분열과 대립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여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평화, 인류 번영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 38개국 주한외국대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던 '2007 세계명인 문화예술대축제'에서 [한반도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계획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 (3) [한반도 프로젝트] 진행

-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는 합의가 담긴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해야 하며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남북 열차 운행구간인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가 건립되면 앞으로의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게 됩니다.
- 태평양권 국가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여,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게되니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의 중심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 활동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촌은 세계 각 나라의 전통가옥으로 건축물을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대륙별, 국가별, 민족별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온 전통이 한자리에 모여, 어울림의 미학으로 펼쳐지는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 (4) 세계문화예술도시 구성

- 세계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공간, 축제 공간, 학회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 관광 및 레저 공간으로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할 것입니다.

#### (5)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효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예술도시 운영기구가 실질적인 문화 UN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수출입 증대, 한류의 확산으로 한류와 연계한 수출입 증대
  -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투자 유치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성장 발전(유라시아 철도 이용으로 인한 시간, 운송비 절감효과 / 다량의 물류 수송 교역량 확대/ 항공, 해운 등 운송 산업 발전 /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 / 통일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마련되어 통일비용 절감)

#### (6) 대한민국의 새 시대

- 한반도 프로젝트 실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문화 중심국으로 도약 가능. 또한, 정치적·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새 시대』 도래

#### (7) 차후 계획 - UN 유치

- 세계문화예술도시가 실질적인 문화 UN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비무장지대에 UN 유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UN이 이전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 세계 평화와 발전의 아이콘이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순위

2

국가 대변혁

정책분야 정치, 행정, 재정, 경제

현재의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국의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1) 현재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는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으로 되어있다. 정부 수립 후 일부 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택·교통·교육·환경 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의 시, 군의 규모가 서로 달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2) 행정 체계 개편

전국의 행정 체계를 대략 인구 150만~200만 규모로 나누어 전국의 시, 군을 재구성한다. 각 행정 단위는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가 지역 경제발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가지게 구성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특구를 선정하여 수출입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 (3) 각 도시 구성 (자생, 자족하는 거점 경제도시)

새롭게 구성한 도시가 자생적 자립 성장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불필요한 행정력을 없앨 수 있다.

식량안보 확보방안으로 농·축·수산업의 재정비 및 도약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균형적으로 자리 잡게 한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인구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면, 의료·문화·교육 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되고 각 도시는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도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경감, 고령화되어 생산 기능으로서 역할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스타트업을 시도하려 하여도 장벽이 너무 많아 중도 포기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청년층이 지방으로 귀환하여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생산기술의 현대화를 시도할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과감한 혜택을 보장해주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생산자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 및 수출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맡고,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생산방안 연구를 지원하며, 지역학교에서는 산학협동조합을 꾸려 민·관·학이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될 경우, 도시가 생산 기능을 갖게 되어 지역 경제성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복귀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향을 정하여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또한 자금을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함께해서 제조업 선진화를 구축한다. 제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업 등 지역의 경제가 순기능을 하게 되면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행정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과 보육, 교육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인구 증가의 효과를 가져와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경쟁력이 갖추어진 도시에는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문화 체육 환경 등이 마련될 것이고, 이는 인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의 분산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정책순위

## 3

##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정책분야 문화, 외교통상, 경제

- 한반도 프로젝트를 실현하여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고 궁극적으로 UN 유치
- 문화외교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주한외국대사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사업)
- K-컬처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성화하여 세계의 문화를 선도
- 경제·의료 등 여러 분야로의 한류 확대를 이루어 경제효과 극대화하도록 지원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전통문화 계승 및 현대화 · 세계화 지속
- 문화 시설 건립하여, 문화를 통하여 건강한 일상 즐기기

‘한류’는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 되어 가는 중이다.

예술의 멋을 알고 해학으로 삶을 꾸려온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로 인정받아 국가 위상은 높아졌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는 여타의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사회의 여러 부문에 갈등의 요소를 내재시켜왔다.

미래 사회의 동력인 다양성·창의성은 사회가 유연할 때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으며, 다음을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업화를 이뤘던 우리의 동력을 이제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응축된 힘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외교강국·정치강국·의료강국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한류를 이룰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책순위

4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 법률 개정위원회 구성(현실에 부합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 학계도 함께 참여하는 개정위원회 구성)
-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의원 수 조정,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및 국회의원 선출 방안 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의무화
-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은 공직 불허하는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없앴.
- 지방자치제 개편, 지방선거 재고
- 국가 대변혁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 진정한 선진국을 위한 정치체제 구축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 국가와 국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욕을 위할 때가 많았고,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봉사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좇는 세력에게는 공직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재직하는 공직자가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영구 제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공직자, 정치인은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정치의식 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여 책임과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보다는 권위와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자리 잡혀,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반칙을 상식처럼 통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고 바른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성장과 귀를 맞추는 정치체제를 갖추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 정책순위

## 5

##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정책분야 정치, 행정, 사법

오늘을 토대로 과거를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진단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난 70여 년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조직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폐단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도출될 수 없기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의와 결단을 거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 정책순위

## 6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정책분야 행정, 경제, 사업자원

-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구 분산 효과, 주택 문제 해결(지방 거점 경제도시)
- 중산층과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
- 수도권외 주택 공개념 도입으로 주택 문제 해결
- 제조업의 국내 복귀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농축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식량 안보
- 조세정책 제고
- 주식시장 활성화
-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시스템, 사회안전망 확충
- 자영업 준비를 위한 경제 교육 시스템 마련
- 청년 일자리, 스타트업을 위한 경제 교육 마련
- 제조업 혁신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

제2의 도약이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현재 중산층·서민층의 몰락 현상은 사회 불안요소가 되었고, 부의 편재 현상은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져, 희망적인 삶을 꾸려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중산층을 활성화하고 서민층을 안정화하며 저소득층을 줄여서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시기를 지나, 우리는 궤도에 올랐다. 우리 민족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룬 성과이지만,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성장발전이 개인의 성장발전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성장발전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성장에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 정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생활 터전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시험장처럼 되어버린 지난 몇 년은 오히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사회 불안요소가 되어버렸다.

국가 대변혁을 통한 인구의 분산과 주거 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정부,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를 마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 임대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게 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경험이 되도록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재기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도적으로는 법률개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여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탈세계화의 현상 등으로 발생할 식량의 문제를 대비하여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와 지역학교는 생산자와 협업하여 생산과 수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하여 현재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일자리 규모와 운영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사회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 정책순위

## 7

##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정책분야 국방, 통일, 외교통상

- ◎ 지정학적 가치를 이용한 실리외교,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서 핫포인트 외교
- ◎ 한반도 프로젝트 실현으로 세계의 중심 역할
- ◎ 공공문화 외교를 통한 외교 지평 넓히기(국제적인 공공문화 외교 행사 개최)
- ◎ 한미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경제적 동반 파트너 역할

대한민국의 분단은 냉전체제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자발적·자립적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인 이슈들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의 냉전체제 속에서 우리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실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체적 외교와 실리적 외교 사이의 간극을 잘 파악하여 유능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외교 전술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잘 이용하고 국제질서의 흐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하며, 군사적 안보역량이 경제·외교역량과 직결함을 알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순위

8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정책분야 경제, 복지, 인적자원

- ◎ 저소득층 해소, 중산층 활성화, 서민층 안정화
- ◎ 자살 없는 나라(자살률 낮추기)
- ◎ 세대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 이해하기
- ◎ 결혼·출산·보육의 공공성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업 기회 확대 의무화
- ◎ 1인 가구의 안정된 삶
- ◎ 체계적인 돌봄 공동체
  - 영유아 보호 정책
  - 보호받는 아동, 교육 복지 정책
  - 노후가 보장되는 삶(국가적 차원의 요양 시설 운영)
- ◎ 공공 의료의 확대
- ◎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삶

앞만 보고 질주한 ‘한강의 기적’은 획기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어, 현재 GDP 10위(2021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는 부강해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21세기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성장의 긴 과정에서 도외시 되었던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시민의 의무, 정치의식, 정치인의 의무 등 시민이 갖추어야 할 부분도 단기간에 이루어져 미성숙한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의식에 의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득권세력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남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결혼과 출산과 보육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끔 하였고, 유연하지 않은 사회의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성장과 복지는 시소처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개인의 생활에 무기력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진취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교육과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순위

9

예방 시스템 구축

정책분야 보건의료, 교육, 기타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마련하다.

- 일상을 안전하게, 폭력(가정, 성, 학교, 직장)으로부터 안전한 삶
  - 소통 창구,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 되살리기
- 팬데믹을 대비하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대비한 의료 시스템 구축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재난 대응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복구 시스템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정책을 마련하고 보상책 논의 중에 여론이 잦아들면 해결책이 미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관리와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예방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책순위

## 10

##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정책분야 교육, 인적자원

- 인성교육 강화
- 대학교육 무상화 추진(철학과 인문적인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
-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교 특화 정책
- 시민교육으로서의 보편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 병행
-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교육(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교육)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동 체계 확산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을 우선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수화되지 않는 인성교육은 도외시되는 측면이 많았고, 교육은 좋은 대학교 진학, 좋은 직장 취직, 좋은 집 장만 등의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및 다양성 함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산업 경쟁력에서 중요치 않은 요소로 여겨졌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융합과 상호 소통, 공감 등의 사회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인성교육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평범한 사회의 일원을 위한 보편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위한 소양 교육, 세계시민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광범위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후반인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의식주 및 의료지원을 위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생 제2막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모음집**

---

2022년 8월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중앙동 2-3)  
(02) 3294-8361

편집·인쇄

마음이다 (02) 2272-1977

---

〈비매품〉